


2014년 해외경쟁 정책동향

2015. 2.

경쟁 정책 국
국제 협력 과

목 차

미국 1

1. FTC, 특허괴물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 발표 3
2. 연방거래위원회(FTC) 2013~14회계년도 업무 계획 4
3. 국제카르텔 가담자 경쟁법 역사상 최초로 강제인도 13
4. 연방거래위원회(FTC) 인사동정 14
5. 특허관리전문회사에 대한 제2차 정보요구서 관보 게재 요청3 15
6. 셔먼법 역외 적용 가능성 확대 판결 17
7. AT&T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관련 기만행위 법원 제소 19
8. FTC, 소비자 기만혐의로 PAE 최초 제재 20
9. 연방거래위원회(FTC) 2014~15회계년도 업무 계획 21
10. FTC, GSK와 노바티스(Novartis) 합작회사 설립 조건부 승인 27
11. FTC, 부모 승인없는 자녀의 인-앱 구매 대금 전액 환불조치 28

캐나다 31

1. 입찰담합 가담 혐의로 정부관료 첫 고발 33
2. 페크만 위원장, 역지불 합의에 대한 강력 대처 시사 34
3. 경쟁총국, 시지남용 건에 대해 최초로 금전적 제재를 동의의결 35

E U 37

1. 기업결합 신고 간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39
2. EU 경쟁총국, 제약사간 역지불합의에 과징금 부과 41
3.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계획 42

4. 삼성전자와 모토로라 표준필수특허 남용행위 제재	43
5. 경쟁법 위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지침 의회 승인	46
6. 강철 연마재 업체 담합 제재	49
7. 쿠라레이의 듀폰 GLSV 영업양수 승인	51
8. 경쟁법 위반 카르텔 기업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확대 판결	53
9. 카르텔 안전지대규정 개정	55
10. 구글의 반독점행위 조사 지속을 암시	57
11. 집행위원회 인사동정	58
12. 신임 집행위원 경쟁법 집행 방향(로이터 인터뷰 내용 요약)	59
13. Facebook의 WhatsApp 인수 승인	61
14. 금융 관련 파생상품시장 카르텔 제재	63
15. EU 경쟁법 집행 10년의 성과와 과제	66
16. 유럽의회, 검색 서비스와 기타 사업 분리 결의안 타결	68
17. UAE Etihad와 이태리 Alitalia의 합작법인 설립 조건부 승인	69

유럽국가 71

1. [영국] 영국 공정거래청(OFT) 2013~14회계년도 업무 계획	73
2. [OECD] 국제협력에 관한 2014년 권고문 채택	77
3. [프랑스] 가스시장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에 시정명령	82
4. [독일] 글로벌 M&A 심사시 국내 영향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	84
5. [독일] Tokyo Electron/Applied Materials 기업결합 승인	87
6. [영국] 영국 경쟁시장청(CMA) 2015~16회계년도 업무 계획	88

호 주 93

1.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2013~14회계년도 업무 계획	95
2.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2014~15회계년도 업무 계획	98

중 국 103

1. P3 해상운송 네트워크 기업결합 불허 105
2. 수입자동차업체 조사 동향 106
3. 광고법 개정 동향 109
4. 절강성 보험업계 가격담합행위에 과징금 부과 112
5. 소송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제소 허용 113

일 본 115

1. 국제 해상운송 카르텔 제재 117
2. [일본/싱가폴] 일본 베어링 제조업체 담합 제재 118

기 타 121

1. [BRICS] 제3회 BRICS 국제경쟁 컨퍼런스 논의결과 123
2. [브라질] CADE, 지하철 공사 입찰담합 조사결과 발표 125
3. 아마존의 독점력 관련 뉴욕타임즈 기고문 요약 127

제8회 서울국제경쟁포럼 129

1. [1세션] 특허관리전문회사의 지재권 남용에 대한 경쟁법 집행 방향 131
2. [2세션] 공기업과 경쟁중립성 139
3. [3세션] 아시아 경쟁법의 조명과 도약을 위한 과제 144

미 국



미국 1. FTC, 특허괴물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 발표

(정리 : 김미영 사무관)

- (개요) 美 FTC는 특허관리전문회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특허괴물 규제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예정 (2014.1~)

* PAEs(Patent Assertion Entities) or NPEs(Non-Practicing Entity): 기술개발이나 제조활동 없이 다른 기업의 특허권을 매입·관리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로서 흔히 ‘특허괴물’(patent troll)로 지칭되고 있음

- FTC는 특히 **PAEs의 사나포선(私拿捕船, privateer)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관심 있게 검토 중인 상황

* 적국 선박을 공격하거나 나포할 수 있도록 정부의 허가를 받은 민간 무장선박으로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체가 **PAEs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경쟁업체에게 특허소송을 내도록 조종하는 행위**라는 의미로 사용됨

- (조사내용) 특허괴물의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PAEs에 대한 실증자료 수집**에 초점

< PAEs에 대한 실태조사 내용 >

- 합법적 회사구조 형성방식(모회사 및 자회사 포함)
- PAEs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종류, 특허 포트폴리오의 내용
- 특허 매집방식과 원 특허보유업자에 대한 보상방식
- 특허 실시행위(assertion activities)의 비용과 편익
- 특허 실시방식(예: 라이선싱, 소송 등) 등

- (시사점) 한국기업을 겨냥한 **PAEs의 특허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우리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노력이 중요

※ 우리 위원회도 특허관리전문회사에 대해 2014년부터 규제를 시작할 계획 (지재권 부당행사 심사지침 개정 등)

<참고: 특허관리전문회사에 의한 소송제기추이(출처: www.patentfreedom.com)>

- PAEs에 의한 소송제기건수는 2004년 이후 매년 평균 33%로 증가

* ('04) 588건 → ('06) 997건 → ('09) 2,402건 → ('10) 3,868건 → ('11) 4,602건

- PAEs가 제기한 소송의 상대회사 기준으로 보면, 휴렛팩커드, 애플, 삼성 전자 순이고, '11년의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피소됨

미국 2.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2013-14회계년도 업무 계획

(정리 : 강승빈 사무관)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경쟁과 소비자보호 분야의 2013-14회계년도 업무계획으로 아래와 같은 세가지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13.4월 미 의회 제출, '13.12.9일 홈페이지 게재)

목표 1 소비자 보호 (사기, 기망 등 불공정 거래관행 방지)

□ (전략 1)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기, 기망 등 불공정 거래관행 조사

○ 소비자 보호 네트워크(Consumer Sentinel Network)* 시스템을 개선·업그레이드하고 신규 회원기관 유치를 통해 정보의 풀을 확대

* 국내외 소비자 피해 정보를 축적하여 조사의 단서로 활용하고 국내외 법집행기관(한국소비자원도 회원)과 소비자 피해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이용되는 FTC의 비공개 웹사이트

- 방대한 소비자 민원 사례와 사용자 수 및 데이터 수요에 부합하도록 소비자 보호 네트워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 연방·주·지방 정부 및 외국 소비자 당국을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 네트워크 회원가입을 확대하고 시스템 이용방법을 교육

- 미국 내 유관기관 및 외국 소비자 당국과의 정보교환을 확대

○ 각종 신고전화, 온라인 신고제도, 설문조사, 기타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관련 민원 및 정보를 수집

- 소비자들이 사기, 개인정보 도용, 금융, 텔레마케팅 등과 관련한 피해를 적극 신고하도록 장려

- 소비자 신고를 분석하여 법집행 대상 선정에 활용하고 민간 및 공공부문 협력 기관들에게 적절한 정보 제공
- 인터넷 검색,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건의 단서 확보
- 신문, TV, 라디오, 온라인 등의 다양한 매체에 게재되는 광고를 감시하여 신고를 통해 접수되지 않는 소비자 피해 감지

□ (전략 2) 법집행을 통한 사기, 기만 등 불공정 거래관행의 근절

○ 적극적 법집행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

- 소비자 건강, 안전 등에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법집행 강화
-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기(사행성 투자, 선불전화카드, 건강보험 또는 의료할인프로그램, 허위 기부금 모금 등)를 엄격히 제재

○ 소비자 금융(consumer credit) 관련한 기만적인 대출 관행이나 불법 금융행위,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모기지론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

- 채무조정·개인회생 관련된 금융사기, 기만적인 채권추심 남용행위, 자동차 판매원에 의한 소비자 피해, 불법 모기지론 광고 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법집행을 통해 이들 행위를 근절

○ 소비자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관행을 근절

- 자동 스팸전화 차단, 스팸문자, 악성 앱, 악성코드 등 온라인과 휴대폰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등의 노력 강화
- 이를 위해 개인정보 침해 행위 처벌, 데이터 보안 관행 개선, 텔레마케팅 수신거부 신청사이트 활용 및 유관기관과 협조 강화

-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주거나 라틴계·흑인계·노년층 등 취약 소비자 계층을 타겟으로 하는 광고나 마케팅 관행을 근절
- 국내외 형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기범죄자들의 처벌 강화
 - 사기범죄자 뿐만 아니라 방조자도 엄격 제재, 국제사기범죄 처벌을 위해 국내외 당국과 협조, FTC 직원의 신중 사기행위 대응역량 및 금융관련 문서·금전거래구조 분석을 위한 회계분석 역량 강화

□ (전략 3) 소비자 교육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및 소비자 피해 방지

- 정보 격차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분야에 교육 노력을 집중
 -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소비자 후생 증대에 관한 교육자료를 영어 뿐 아니라 스페인어로도 소비자, 기업, 기타 정부기관에 제공
 - 금융, 건강 및 안전, 개인정보보호, 휴대폰, 신기술, 전화사기, 계열사 마케팅, 출입국 사기 등 전략적 관심분야에 집중
 -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와 경기침체에 영향을 받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예방 교육 지속적 실시
- 소비자와 기업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방·주·지방 정부, 외국 정부 및 민간과의 협력 강화
 - 기업 및 소비자보호단체와 협력하여 보다 많은 소비자가 FTC 홈페이지와 관련 사이트에 방문하도록 유도
 - 초국경적 소비자 보호 문제에 관해 소비자와 기업을 교육하기 위해 국제 기구와 협력
 - 보다 많은 소비자에게 교육 내용을 전파하기 위해 웹세미나, 비디오, 블로그, 스마트폰 등 다양한 매체 활용

- 각각의 기관이 가지는 비교우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다른 정부기관과 공동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 미디어와 광고 회사를 대상으로 광고 관련 법령 교육
- 특정 계층의 건강,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한 교육을 강화
- 아동과 청소년에게 영향을 끼치는 마케팅에 대한 정보 제공, 노년층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사기 피해 사례를 집중 교육, 라틴계·흑인 등 다양한 집단에 대해 맞춤형 교육 실시

□ (전략 4) 워크숍, 보고서 발간, 입법, 소비자 주창 등을 통한 소비자 보호

- 워크숍 개최 및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새로운 소비자 문제에 대응
 -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등의 분야에 대해 워크숍 개최 및 보고서 발간
 - 웹브라우저 개발자, 광고회사, 표준기구 등과 편리하고 효과적인 웹사용 내역 추적 금지시스템 개발을 위해 협력
- 규제 재검토 프로그램(Regulatory Review Program)을 강화하여 소비자문제에 관한 규제를 개선
 - 규제 시행 10년후 재검토를 실시하여 소비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기업 이행부담도 감소시키는 방안 검토
- 연방주정부 및 외국 정부 공무원들에 대한 소비자보호 주창활동을 통해 정책결정시 소비자 문제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도록 유도
 - 법령, 고시 등을 제정시 산업, 소비자 등의 당사자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타 기관과 조율

-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도록 촉구하는 권고의견서를 법원에 송부
- (전략 5)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에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여 세계 시장에서 미국 소비자를 보호
 - 다자기구, 지역협의체 및 외국 소비자당국에 대한 권고 및 이들과의 협의를 통해 정책개발 및 실행에 영향력 행사
 - OECD를 통해 온라인 및 모바일 결제시스템, 디지털 콘텐츠, 양방향 미디어 등의 새로운 이슈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와 전자상거래의 차세대 정책 원칙을 수립
 - 외국 관련 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특히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근원인 국가들의 형사당국과의 협력을 강화)
 - 신생 소비자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당국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 실시를 통해 소비자보호 및 개인정보 정책 역량 강화

목표 2

경쟁제한적 기업결합과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 (전략 1) 소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과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
 - 과급효과가 큰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적시에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

* FTC는 직접 과징금을 부과할 권한은 없으며 법원에 제소한 후 판결을 통해 간접적으로 과징금 부과

- 직원교육을 통해 조사 기술과 반독점 분석 능력을 향상시키고 소송 수행능력 제고
- 충분한 피해구제방안이 담긴 동의를결을 도출하여 반경쟁적 기업결합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
- 경쟁제한성이 있는 기업결합 사건에서 기업분할 등이 담긴 동의의결을 기업이 이행하는지 감시하고 위반시 과태료(civil penalty) 부과
- 변호사, 경제학자 등의 전문직업군을 고용하여 기업결합과 기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경제분석 실시
- 연방·주정부 및 외국정부 공무원과의 공조를 통해 사건처리 역량을 극대화하고 업무의 중복 회피 및 시정조치 내용의 조율 도모
-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법집행 결과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업결합 절차 개정이 필요한지 검토
- 중요한 경쟁이슈와 관련된 공청회, 회의, 보고서, 연구용역, 워크숍 결과를 사건 조사시에 반영

□ (전략 2) 경쟁법·정책 교육을 통한 소비자 피해 예방

- 보고서, 기고문, 연설과 FTC 홈페이지, 이메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에 대한 경쟁법·정책 교육
- FTC의 업무에 대한 정보와 경제학·경쟁법의 기본원칙을 일반 대중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
- 수직 결합, 지재권, 보건 등 경쟁법의 특정 영역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기업들이 경쟁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
- 신생 경쟁당국 등 외국 경쟁당국의 경쟁법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원
- 가이드라인, 경제분석 보고서 등 FTC의 정책과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를 FTC 웹사이트에 게재

- 세미나, 토론, 회의 등에 상임위원급을 참석시켜 FTC가 기업결합 및 기타 반경쟁적 행위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설명

□ (전략 3) 연구, 보고서, 경쟁주창 활동을 통한 소비자 이익 향상

- 이해당사자가 참가하는 워크숍, 회의, 세미나,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상거래 관행과 시장현황에 대한 이해도 제고
- 경쟁이 어떻게 소비자에게 이득을 주는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경쟁주창 활동 실시
- 중요 경쟁이슈에 대한 연구 및 보고서 발간
- 주요 경쟁정책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연방법원과 주법원에 권고의견서를 송부하여 경쟁을 촉진하는 판결을 유도

□ (전략 4)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세계 시장에서 미국 소비자를 보호

- 다자기구 및 외국 경쟁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 개발과 집행 과정에서 영향력 행사
- ICN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이사회와 각 작업반*에서 주도적 역할을 유지

* ICN 작업반(7개) : 카르텔, 단독행위, 기업결합, 경쟁당국효과성, 경쟁주창, 회원가입, 운영정관

- OECD, UNCTAD, APEC 등의 다자기구에 대한 참여를 확대
- 기업결합과 단독행위 분야에서 외국 경쟁당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제도 수렴을 촉진(이를 위해 다자기구에서 적극 노력)
- 신생 경쟁당국이 경쟁정책 집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돕기 위해 기술지원 사업을 실시
- 양자협의회 및 사건협력을 통해 중국 및 인도 경쟁당국과의 협력을 강화

목표 3	업무 효율성 증진
-------------	------------------

□ (전략 1) 효과적인 인적 자원 관리

- 인적자원 수요를 조사한 후 이에 따라 능력과 자격을 갖춘 다양한 인재를 신속히 채용하고 교육시켜 업무에 투입
- FTC의 목표 및 우선순위 달성을 위해 성과중심적 업무문화 조성
- 전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성공적인 조직의 조건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을 확인
-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직원들의 전문지식과 기술 수준을 제고 하도록 장려
- 인적자원 관리 효율화를 위해 신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예 : 근태 및 복무 관리 시스템의 자동화 등)

□ (전략 2) 효과적인 업무 인프라와 보안 시스템 제공

- FTC 청사를 워싱턴 내 다른 건물로 이전하는 방안을 총무처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와 협의
- 정기적으로 비상시 업무계획(Continuity of Operations Plan) 점검 훈련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위기관리 의식 제고
- 연방위기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과 협의하여 비상시 업무계획 개선
- 직원들에게 IT 시스템의 취약점에 대해 교육

□ (전략 3) 효과적인 지식관리 시스템 제공

- 국가기록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이 승인한 FTC 보유 정보의 관리와 처분의 전자화 계획 실행
- 의사결정과정과 사건 관리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신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업무절차 개선
- 직원들에게 정보와 기록의 전자적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

□ (전략 4)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효과적인 예산 관리 실시

- FTC의 예산 시스템과 상호 호환이 되지 않는 시스템(예 : FTC의 조달 시스템)을 예산 시스템과 통합
- 정책상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을 재배치하여 중요한 업무에 자원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
- 감사담당관실을 통해 FTC 사업과 운영에 대한 감사 및 조사

미국 3. 법무부, 국제카르텔 가담자에 대한 최초 강제인도 시행

(정리 : 홍수진 사무관)

□ (개요) 美 법무부는 경쟁법 사상 최초로 이탈리아인 Romano Piscioti를 국제카르텔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미국으로 강제인도('14.4.3.)

□ (내용) R.Piscioti는 Parker ITR의 전 임직원으로 Marine hose* 국제 카르텔 사건**에 가담하여 서면법 위반 혐의로 美 법무부로부터 기소('10.8월)

* marine hose : 유조선과 비축시설 간 원유를 운송하는데 사용되는 특수고무호스

** Marine hose 국제카르텔 사건 : 일본 · 영국 · 프랑스 · 이탈리아에 있는 6개 특수고무호스 제조사들이 1999년부터 2006년까지 가격담합,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에 참여한 사건으로, 공정위는 '09.5월 관련업체와 임직원에게 시정명령 및 총 557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 이후 R.Piscioti는 독일에서 체포('13.6.17.)되어 美-獨 범죄인인도조약에 근거해 미국으로 인도('14.4.3.)

○ 美 플로리다 남부 지방법원은 벌금 5만불 및 징역 2년 부과('14.4.24.)

□ (의의) 금번 사례는 국제카르텔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대응의지를 보여주는 바, 우리 수출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 미국의 경우 향후 국제 공조를 통해 역외에 있는 카르텔 가담자에 대한 처벌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전망

* William Baer 美 반독점국 차관보는 “해외 경쟁당국들과 협력하여 국 · 내외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카르텔로부터 소비자를 계속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14.4.24, DoJ 보도자료)

○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국제카르텔에 연루되지 않도록 현지 한국 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예방교육 강화 및 경각심 제고 필요

※ 출처 : 미 법무부, “First Ever Extradition on Antitrust Charge” ('14.4.4.) 등

미국 4.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인사동정

(정리 : 김이영 사무관)

- (개요) Terrell McSweeney가 FTC 상임위원으로 신규 취임('14. 4. 28)
 - * 민주당 소속인 McSweeney 위원은 2014.4.9. 찬성95:반대1로 상원 인준 통과
 - 민주당 소속인 신규 상임위원의 취임으로 FTC 전체 상임위원 5명 중 민주당 의원은 3명이 되어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
- (주요이력) 美 법무부 반독점국 경쟁정책 및 정부간 관계(competition policy and intergovernmental relations) 분야 수석 자문관(Chief Counsel)이며 과거 美 바이든 부통령의 국내정책 자문관(Domestic Policy Advisor)으로 활동

< 참조 : Terrell McSweeney 상세 이력 >



- 하버드대학, 조지타운대 로스쿨 졸업
- O'Melveny & Myers, LLP 변호사
- 美 바이든 상원위원 부 비서실장(Deputy Chief of Staff) 및 정책 국장(Policy Director)
- 美 오바마 대통령 부 보좌관(Deputy Assistant) 및 바이든 부통령 국내정책 자문관(Domestic Policy Advisor)
- 美 법무부 반독점국 경쟁정책 및 정부간 관계 분야 수석 자문관(Chief Counsel)

- (전망) FTC 내 민주당 상임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FTC의 집행은 더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

※ FTC 상임위원은 연방 경쟁법, 소비자보호법 집행 등 FTC 공식 업무에 대해 최종 결정권을 가지며 사안별로 1인 1표, 과반수 표결에 의해 결정됨

※ 출처 : 미국 FTC 홈페이지, "Terrell McSweeney Begins Term at Federal Trade Commission" ('14.4.28.) 등

미국 5. FTC, 특허관리전문회사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정리: 김이영 사무관)

- (개요) 美 FTC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 실태조사를 위해 수정된 제2차 정보요구서*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OMB(관리에산처)에 요청('14.5.13.)

* FTC Act Sec.6(b)의 정보제출 명령권에 근거하여 FTC가 기업에 대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명시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조사서

- (그간의 경위) FTC는 NPE의 활동이 혁신과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계획을 발표('13.9.27.)하고 기업들이 FTC에 제출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제1차 정보요구서를 관보에 게재('13.10.3.)

- (제1차 정보요구서) FTC는 정보요구서(안)*에 대한 의견(public comment) 수렴을 위해 이를 관보에 게재했고 70건의 의견이 제기됨

* 무선통신분야 15개 기업을 포함한 25개 NPEs에 대하여 NPE의
(i) 기업구조, (ii) 보유한 특허의 종류, (iii) 특허 매집방식과 원 특허 보유자에 대한 보상방법, (iv) 특허실시행위(assertion activities)의 비용·편익, (v) 특허 실시방식에 대한 자료를 요청

- 1차 관보 게재시 대부분의 의견은 이 연구를 지지하였으며, 몇몇 의견은 자료 제출 대상 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것을 요청

- (금번 조치) FTC는 1차 관보 게재 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논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토록 정보요구서를 수정

< 정보요구서 수정사항 >

- USPTO(美 특허·상표청)와 협조하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특허 관련 자료를 대상 기업에 요청하는 것을 최소화
- 질문을 단순화하고 범위를 좁힘
- 자료 작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스프레드시트를 추가
- 조사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

□ (향후 일정) 제2차 정보요구서가 60일 내에 OMB의 승인을 거쳐 관보에 게재될 경우 대상기업들은 게재일로부터 30일내에 자료를 제출해야함

□ (평가) 금번 정보요구서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NPE의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Edith Ramirez 美 FTC 의장은 “특허는 혁신과 경쟁의 핵심이며, 특허 관리전문회사 활동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실증조사를 확대하기 위해 FTC Act Sec.6(b)의 권한을 사용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 결과를 정책결정의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고 언급 ('13.9.27, FTC 보도자료)

※ 본 동향은 주미대사관 경쟁협력관 김형배 국장 전문('14.5.14)을 참조하였음

미국 6. 연방항소법원, 셔먼법 역외적용 가능성 확대 판결

(정리 : 김이영 사무관)

1. 개 요

- 美 제2항소법원은 Lotes v. Hon Hai Precision* 사건에서 FTAIA상 셔먼법의 역외 적용 요건**을 완화(6.4)

* Lotes와 Hon Hai Precision은 모두 대만국적의 USB 케이블 제조사로, Lotes는 중국, Hon Hai Precision은 중국 및 기타지역에서 케이블을 제조

** <셔먼법 역외적용 요건(FTAIA(§6))>

- 역외에서 발생한 반경쟁적 행위라도 미국경제에 ① 직접적(Direct)이고 ② 상당(Substantial)하며 ③ 충분히 예측할수 있었던 효과(Reasonably Foreseeable Effect)를 미친 경우, 민사소송인 경우에는 ④ 그 효과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입은 피해에 원인을 제공(Such Effect Gives Rise to a Claim)한 경우, 셔먼법을 역외 적용 할 수 있음
- FTAIA(Foreign Trade Antitrust Improvement Act)는 셔먼법의 역외 적용을 제한하는 법률로 예외적으로 상기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셔먼법 역외행위 적용을 허용

2. 사건 경위

- Lotes는 경쟁사인 Hon Hai의 RAND-Z 조건* 미이행 및 중국 내 특허 소송 제기가 셔먼법 위반임을 주장하며 뉴욕 법원에 Hon Hai를 제소(12.9)

* RAND-Z(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zero cost) 조건 : 표준특허 보유자는 로열티 없이 비차별적으로 특허 사용을 제공해야한다는 조건

- Lotes는 셔먼법 위반행위가 역외(foreign)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행위는 제조 시장의 경쟁을 제약하고 미국 소비자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위협효과(in terrorem effect)를 갖는다고 주장

- 뉴욕지방법원은 역외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사건 관할권 (Subject Matter Jurisdiction) 미비를 이유로 Lotes의 청구를 기각(13.3.)

- 셔먼법 역외 적용 요건은 관할권의 문제이며, 당해 행위는 셔먼법 역외 적용 요건(미국경제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효과)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

□ Lotes는 제2항소법원에 항소하였으나 법원을 이를 기각('14.6.4.)

3. 서면법 역외 적용 범위 확대 관련 판결 내용

□ “직접적 효과(direct effect)”의 의미를 완화하여 해석

- 미국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direct, substantial, and reasonably foreseeable)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역외 적용 요건을 “타당하게 근접한 인과 관계(reasonably proximate causal nexus)가 있을 것”이라 완화*하여 해석

* 제9항소법원은 United Phosphorus, Ltd. v. Chemical Co. 판례에서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피고의 행위의 직접적 결과로 인한 것 일 것 (immediate consequences of the defendant’s activity)”으로 엄격하게 해석

4. 평가 및 시사점

□ 제7항소법원에 이어 제2항소법원도 서면법의 역외 적용 가능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판결하였으며, 역외 적용 관련 다른 항소법원의 판례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

* 현재 Motorola Mobility (제7항소법원), United States v. Leung (제9항소법원) 사건이 현재 계류 중으로 올해 안으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

※ 출처: GCR, “US courts aligning on FTAIA with second circuit ruling” 등 ('14.6.6.)

미국 7. FTC, AT&T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관련 기만행위 법원 제소

(정리 : 김이영 사무관)

- (개요) FTC는 속도 제한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로 판매한 AT&T*의 행위가 불공정(unfair)하거나 기만적인(deceptive)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법원에 제소(10.28)

* AT&T Mobility LLC : 미국 제2의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자로 1억 1,8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

- (제소이유) FTC는 다음의 이유로 AT&T의 행위를 불공정·기만행위라 판단
- (불공정 행위 여부) AT&T는 데이터 속도 제한 가능성을 밝히지 않고 무제한 요금제라 광고하여 소비자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
 - FTC는 AT&T가 2011년부터 2,500만회 이상 속도를 제한 하였으며, 이로 인해 350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

<FTC법 5조 (a)상 불공정한 행위(unfair acts or practices) 구성요건>

- 소비자에 상당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
-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회피할 수 없을 것
- 소비자 및 경쟁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형량하여 긍정적 효과가 더 크지 않을 것

- (기만 행위 여부) AT&T는 무제한 데이터 요금이 아니면서 무제한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광고
- 계약서에 속도 제한 가능성을 명기하지 않았으며, 계약 체결·갱신·이행시 속도 제한 관련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음

<FTC법 5조 (a)상 기만 행위(deceptive acts or practices) 구성요건>

-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사실 은폐 혹은 누락이 있을 것
- 통상의 지적 능력을 지닌 소비자가 사실에 부합하게 인식할 수 없을 것
- 중요한 사항을 은폐 혹은 누락

- (시사점) 우리나라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LTE 무한요금제도 일정 사용량 초과시 속도 저하 등 제한 조건이 있는 바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 필요

※출처: 미국 FTC, "FTC says AT&T has misled millions of Consumers with unlimited data promises"
한국 소비자원, "제한 조건 있어 명칭이 무색한 LTE 무한요금제" ('14.9.18.)

미국 8. FTC, 소비자 기만혐의로 PAE 최초 제재

(정리 : 홍수진 사무관)

□ (개요) 美 연방거래위원회(FTC)는 MPHJ Technology Investments^{*}(이하 MPHJ)가 거짓 정보에 근거하여 특허료 납부를 요구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였다는 이유로 향후 유사 행위를 금지하는 **동의명령 결정**(‘14.11.7.)

* 스캔된 문서를 이메일에 첨부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변환시키는 기술 특허를 보유한 특허관리 전문회사(Patent Assertion Entity)

□ (행위사실) MPHJ사는 문서 스캐닝기술 관련 특허 매입 후(‘12.9.) 16,000여개의 중소기업에 대해 동 특허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직원 1인당 \$1,200의 특허료를 납부하라는 경고성 서신을 송부

○ 후속 서신에서 ①다수의 다른 회사들이 특허료를 납부하기로 했으며, ②회신하지 않는 경우 2주 이내에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특허료 납부를 촉구

- 그러나, 실제로 특허료 납부에 동의한 회사는 16,000여 개 사 중 17개사에 불과하며 MPHJ가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한 건도 없음

□ (조치내용) FTC는 MPHJ사가 특허권 행사과정에서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를 기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개시

○ 이에 MPHJ사는 향후 특허권 행사 시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표시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동의명령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FTC가 승인

- 공보 게재 후(30일) 동의의결안이 최종 확정되면 **합의내용 위반 시** 서신한 건 당 최대 16,000달러의 민사제재금(civil penalty) 부과 가능

□ (의의) FTC가 특허관리회사(PAE)에 대해 최초로 제재한 사건

○ 美 상·하원 모두 특허괴물 규제 강화 입법을 15년도 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발언함에 따라 향후 특허관리회사 제재 수준이 강화될 지 귀추가 주목

※ 출처 : FTC, “*FTC Settlement Bars Patent Assertion Entity From Using Deceptive Tactics*”(‘14.11.6.)

미국 9.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2014-15회계년도 업무 계획

(정리 : 홍수진 사무관)

◇ 美 FTC는 2015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제출한 2014-15 회계년도 업무계획에서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

1. 2014-2015 회계년도 업무계획

목표 1	소비자 보호
------	--------

□ (세부목표 1)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기만적·불공정 관행 적발 및 제재

-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큰 위법행위에 법 집행역량 집중
 -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사기·기만행위 또는 피해가 큰 불공정관행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 및 정보수집 실시
- 각종 신고전화, 온라인 신고제도, 이메일, 설문조사, 기타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소비자 피해 관련 민원 및 정보를 수집
 - 소비자들이 사기, 개인정보 도용, 금융, 텔레마케팅 등과 관련한 피해를 적극 신고하도록 장려
 - 소비자 신고를 분석하여 중점 법집행 대상 선정에 활용
- 소비자 보호 네트워크(Consumer Sentinel Network*)를 통해 소비자 민원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를 촉진
 - * 국내외 소비자 피해 정보를 축적하여 조사의 단서로 활용하고 국내외 법집행기관과 소비자 피해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이용되는 FTC의 비공개 웹사이트
- 인터넷 검색, 신문, TV, 라디오, 온라인 등의 다양한 매체에 게재되는 광고를 감시하여 소비자 스스로 인지하기 어려운 소비자 피해를 직접 파악

□ (세부목표 2)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 (교육)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소비자 후생 증대에 관한 교육자료 제공 및 설명회·워크숍 개최
 - 정보접근성이 낮은 계층이나 취약 소비자 계층에 대해 우선 교육 제공
 - 특정 인구집단에 대해 특화된 교육* 제공
- * 예: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에 대한 사기 예방 교육, 라틴계 인구에 대한 스페인어 교육 제공 등
- 모바일 기기나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효과 제고
- 민간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민간단체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전파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한정된 자원의 활용도 제고
- (정보제공) 개인정보 도용 방지를 위한 정보 공개
 - 개인정보 도용이 발생한 웹사이트 목록 및 관련 소비자 민원 내용 공개로 유사한 피해 방지
- (연구·조사) FTC법 제6조*에 의거 기업으로부터 수집한 정보 및 조사결과 공개
 - * 기업에 대한 연차보고서 제출 요청 또는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서 요청 권한, 공익을 위해 취득한 정보를 공개할 권한 등이 규정
 -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새로이 등장하는 특정 소비자 문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세부목표 3)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외 주체들과의 협력

- (국내) 연방·주정부 및 외국 정부에 대한 소비자보호 주창활동을 통해 정책결정 시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유도
 - 타 기관이 법령, 고시 등 제·개정시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의견에 대한 의견을 제시
 -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도록 촉구하는 법정의견서(amicus brief)를 법원에 송부

- (국외) 다자기구, 지역협약체 및 외국 소비자당국에 대한 권고 및 이들과의 협의를 통해 정책개발 및 실행에 **영향력 행사**
- OECD를 통해 온라인 및 모바일 결제시스템, 디지털 콘텐츠, 양방향 미디어 등의 새로운 이슈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와 전자상거래의 차세대 정책 원칙을 수립
- 외국 관련 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특히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근원인 국가들의 형사당국과의 협력을 강화)
- 신생 소비자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당국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 실시를 통해 소비자보호 및 개인정보 정책 역량 강화

목표 2	경쟁의 유지 및 보호
-------------	--------------------

□ (세부목표 1)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및 관행 제재

- 경제분석 및 사실에 기반한 기업결합 심사 또는 기타 경쟁제한적 관행에 대한 조사
- 기업결합 심사가 적절한 시일 내에 완료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소송제기 시 적시에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
- 직원교육을 통한 조사 기법과 분석 능력 향상 및 소송 수행능력 제고
 - 교육위원회(Training Council)를 신설하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모범관행 발굴
- 충분한 피해구제방안이 담긴 동의를결안을 도출하고 충실한 이행을 확보
- 법 집행 내부지침을 재검토하여 경쟁당국의 조사 및 의사결정 절차의 효율성 제고

□ (세부목표 2) 조사·연구활동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통한 경쟁법 이해도 제고 및 경쟁법 자율준수 인식 제고

- 보고서, 기고문, 연설과 FTC 홈페이지, 이메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에 대한 경쟁법·정책 교육
- 연방·주정부 정책기안자에 대한 경쟁주창활동을 통해 정책의 경쟁제한성,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인식제고
-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민원·보도자료·연구 결과를 공표하여 운영과정의 투명성 제고

□ (세부목표 3) 경쟁보호 및 촉진을 위한 국내·외 주체들과의 협력

- (국내) 국내 정부기관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경쟁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 수립 유도
- (국외) 초국경적 사건 처리 시 효율성 증진과 일관된 조사결과 도출을 위해 외국 경쟁당국과의 협력 확대
 - 양자 간 협의회 개최·서면 의견교환·기술지원 등을 통해 인도 및 중국 경쟁당국과의 관계 강화
 - 다자기구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유지하여 정책 개발과 집행 과정에서 영향력 행사
- * 예) ICN, OECD, UNCTAD, APEC 등의 다자기구 또는 TP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등의 다자 협력체제
-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으로 자국 경쟁법과 일치하는 제도의 확산 촉진

목표 3	조직 성과 개선
-------------	-----------------

□ (세부목표 1) 인력 및 업무 인프라의 효과적 활용

- 보유 정보의 관리·처분의 전자화(e-filing)
 - 전자컨텐츠 관리 시스템(Electronic Content Management system)* 도입

* 소송 기록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안전하게 보관하여 업무 수행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영구 보관 자료로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는 과정까지 포함

- 전 기관 차원의 정보 구조화 작업* 실시

* 문서 제목 양식 통일, 파일 접근 권한 등을 체계화하여 정보 탐색 용이성 및 정보 접근성 제고

○ IT기술을 활용하여 대중 및 직원의 정보 접근성 강화

- FTC 생산 자료(소송기록, FTC 결정내용 등)를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대중의 정보 접근성 강화

- 모바일 플랫폼 구축으로 직원들의 업무망 접근성 강화

○ FTC의 예산 시스템과 상호 호환이 되지 않는 시스템(예 : FTC의 조달 시스템)을 예산 시스템과 통합하여 효율적 예산사용

□ (세부목표 2) 경쟁력 있는 다양한 인력 양성

○ 업무목표와 개인특성을 연계하여 적재적소에 인력배치

○ FTC의 목표 및 우선순위 달성을 위해 성과중심적 업무문화 조성

○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Federal Employee Viewpoint Survey)를 실시하여 성공적인 조직의 조건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을 확인·자체 평가

○ 평등고용위원회(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지침에 근거하여 개인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공평한 기회 제공 노력

2. 평가

□ 경쟁제한적 행위 및 소비자 기만 행위의 효과적 규제를 위해 타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사건처리의 효율화를 중요시하는 경향

- 기타 소비자민원 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웹사이트 마련, 법원에 대한 적극적 의견 개진 등을 통한 정부부문과의 협력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과의 협력도 확대하는 추세
 - 보유 정보의 구조화·직원 교육강화·시장 모니터링을 통한 중점법 집행활동 선정·외부 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제한된 자원의 활용도 제고
- 사후적 제재 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한 자율준수 의식제고 등 법 위반 방지 및 피해 예방활동에도 상당한 가중치를 부여

미국 10. FTC, GSK와 노바티스(Novartis) 합작회사 설립 조건부 승인

(정리 : 유영욱 서기관)

□ (개요) 美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글로벌 제약회사 GSK(Glaxo SmithKline)와 노바티스(Novartis)간 합작회사 설립 전에 대해 니코틴 보조제 시장에서의 경쟁적 효과를 우려하여 조건부 승인('14.11.26.)

※ GSK와 노바티스는 각각 영국, 스위스에 본부를 둔 글로벌 제약회사로 미국시장에 치약, 감기약, 소화제, 스킨케어제품, 금연보조제 등을 판매

○ GSK와 노바티스는 양사의 소비자 헬스케어 사업부문을 통합하는 합작회사* 설립 계약을 체결('14.4.22.)

* 합작회사의 지분 보유 비율 : GSK(63.5%), 노바티스(36.5%)

□ (경쟁당국 판단) 동 결합시 소비자 헬스케어 시장 중 “브랜드 (Brand)” 및 “자체 브랜드(Private Label)” 니코틴 보조제(Nicotine Replacement Therapy, 이하 NRT)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킨다고 판단하고 조건부로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

○ (경쟁제한성 판단) 시장 집중 상황 및 신규 시장 진입 가능성을 고려

- (시장 집중 상황) GSK와 노바티스는 미국 내 브랜드 NRT시장의 복점 공급사이며 자체 브랜드 NRT를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3개사 중 2사에 해당하여 본 결합시 NRT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가 높음

- (신규 진입) 니코틴패치 개발 비용·시간, 식약청(FDA) 승인기간 등을 고려하면, 적시에(timely) 충분한(sufficient) 신규 진입을 기대하기 어려움

○ (승인 조건) 노바티스는 니코틴 보조제(NRT)와 관련 일체의 자산과 권리를 제3자인 Dr. Reddy's*社에 매각하도록 함

* Dr. Reddy's는 미국에서 알러지 및 위장약 일반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2014년 10월 노바티스와 자산 매입 및 권리 인수 계약을 체결함

- 또한 Dr. Reddy's가 신규 의약품 포장 업체를 찾을 때까지 노바티스가 Dr. Reddy's와 제품 포장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의 2차 포장을 대행

□ (관찰 및 평가) 글로벌 제약회사 간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이 내려진 사안으로 의료·제약 분야에서 최근 미국 경쟁 당국의 법 집행 강화 동향의 연장선에 있는 조치로 평가

※ 출처 : FTC, “FTC puts conditions on pharmaceutical joint venture between GlaxoSmithKline and Novartis” ('14.11.26.)

미국 11. FTC, 부모 승인없는 자녀의 인-앱 구매 대금 전액 환불조치

(정리 : 홍수진 사무관)

□ (개요) 美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구글(Google)사가 부모 동의 없이 자녀의 인-앱(In-App*) 구매를 허용하여 발생한 결제 금액을 전액 환불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동의를결안을 최종 승인('14.11.7.)

* 스마트폰 앱 사용 도중 팝업창을 클릭하여 앱 내에서 이용되는 추가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예) 게임 앱 사용 중 게임 아이템 구매

□ (행위사실) 구글은 2011년 인-앱 구매방식을 도입하면서, ① 계정 보유자(부모)의 비밀번호 요청 등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② 결제 시 인증절차를 도입한 2012년 이후에도, 한 번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이후 30분 간 별도의 인증 없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운영

○ 이로 인해 부모 계정을 이용하여 앱을 사용하는 자녀들이 결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대금이 청구되는 피해사례 속출

○ 구글은 이와 관련하여 수천 건의 불만사례를 접수하였으나, 환불 문제는 앱 개발자와 개별적으로 협의하도록 권고할 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

□ (경과) FTC는 구글의 동 행위가 FTC법 제5조의 불공정 또는 기만적인 행위(unfair or deceptive acts)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구글은 FTC에 동의를결안 제출('14.9.4.)

□ (동의를결 내용) ① 부모 동의없이 발생한 인-앱 구매로 청구된 비용에 대해 전액 환불조치 및 ② 결제 전 명시적인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결제 시스템 개선

□ (향후 일정) 구글은 인-앱 구매 시스템을 이용한 모든 고객에게 부모 동의 없는 자녀의 인-앱 구매에 대한 환불이 가능함을 고지하고, 요청 즉시 전액 환불 조치해야 함

- 1년 내 총 환불 금액이 1,900만 달러(최소 환불금액)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금액은 FTC 또는 국고로 귀속

□ (의의) FTC가 인-앱 구매행위에 대해 조치한 세 번째 사건*으로, 모바일 시장에 대한 감시수준을 높이고 있는 최근 동향을 재확인

* FTC는 인-앱 결제방식에 대한 3년 여 간의 조사 끝에 애플('14.1.)과 아마존('14.7.)에 대해서도 환불 및 결제구조 변경을 골자로 한 동의의결에 합의

- FTC는 모바일 결제시스템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모바일 산업에 대해 신규 결제시스템 관련 소비자 보호에 관한 권고문을 제정하여 배포('13.3.)하는 등 **모바일 시장을 중점 감시**

※ 출처 : FTC, *"FTC Approves Final Order in Case about Google Billing for Kids' In-App Charges without Parental Consent"*(‘14.12.5.) 등

캐나다



캐나다 1. 입찰담합 가담 혐의로 정부관료 첫 고발

(정리: 홍수진 사무관)

- (개요) 캐나다 경쟁총국은 Library and Archives Canada(LAC)*가 발주한 IT 서비스 관련 입찰에서 담합을 합의한 **Microtime**** 前 임원 3명 및 LAC 직원 3명을 고발('14.5.2.)

* 각종 기록물을 수집·보존·제공하는 캐나다 연방 정부 기관

** CRM 솔루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캐나다 오타와 소재 IT기업

- (행위사실) Microtime 前 임원 3인은 2009년 4월부터 9월까지 LAC가 발주한 총 350만 캐나다 달러 상당의 IT 서비스 관련 입찰에서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관련 기업들과 입찰 참여여부를 합의

- 캐나다 경쟁총국은 Immunity program*를 활용한 LAC 내부자의 신고로 동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09)

* 캐나다 경쟁총국은 2000년부터 Immunity program을 도입하여 i) 경쟁총국이 인지하지 못한 법 위반 행위를 최초로 신고하거나, ii) 이미 인지하고 있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최초로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 검찰 고발을 면제

- (조치내용) 경쟁법 상 입찰담합 혐의로 Microtime 前 임원 3인, 재정행정부(Financial Administration Act) 상 “타인으로 하여금 정부를 기만하는 기회를 제공한 행위” 혐의로 LAC 직원 3인을 검찰 고발

- 법원은 재정 행정법 상 최대 5년, 경쟁법 상 최대 14년까지 징역 선고 가능

- (평가) 현직 관료를 입찰담합 가담 혐의로 검찰 고발한 첫 번째 사례

- 공공조달 분야에서의 입찰담합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서 상당한 억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존 페크만(John Pecman) 캐나다 경쟁총국장은 “이번 조치는 캐나다 소비자들과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행위를 한 자들을 끝까지 추궁하겠다는 경쟁당국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

※ 출처 : GCR, “Canada’s bureau starts first prosecution of government employees”(‘14.5.6.) 등

캐나다 2. 페크만 위원장, 역지불 합의에 대한 강력 대처 시사

(정리 : 김이영 사무관)

□ (개요) 존 페크만(John Pecman) 캐나다 경쟁총국 위원장은 제약 회사간 역지불 합의*에 대해 엄격히 대처할 것이라 선언** (9. 23.)

* 역지불 합의(pay for delay) : 복제약 시판 연기를 조건으로 오리지널 제조사가 복제약 제조사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

** George Mason University Pharma Conference ('14. 9. 23.)

□ (주요내용) 역지불 합의에 대한 캐나다 경쟁총국의 향후 집행방향을 제시

○ 역지불 합의에 대해 당연 위법(per se illegal)에 의한 형사 처벌 대상 또는 공동행위, 시지남용행위로 보아 처벌하겠다고 밝힘

* FTC v. Actavis에서 美 대법원은 역지불 합의에 대해 당연 위법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FTC의 주장을 기각하고 합리의 원칙(rule of reason)에 의거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 ('13. 6.17.)

○ 미국과는 달리 특허 만료 전에 복제약의 시판을 허용하는 오리지널 제조사와 복제약 제조사간 합의¹⁾에 대해서도 경쟁법 적용

* FTC v. Actavis에서 미국 대법원은 특허권 만료 이전에 복제약 제조사의 시판을 허용하는 합의에 대해 경쟁을 촉진시킨다고 보아 합법적 행위로 판단(deem legal)

○ 또한, 효과적인 법 집행을 위해 미국과 같이 잠재적 역지불 합의시 사업자가 경쟁당국에 통보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

* 현재 우리나라도 특허권자와 복제약 제조사간에 우선판매품목허가 획득 등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15일 내에 식품안전처장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합의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안 입법 예고('14. 3. 21.)

※ 출처 : 캐나다 경쟁총국, "Patent Litigation Settlement Agreements : A Canadian Perspective"

1) 페크만 위원장 발표 원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역지불합의가 성립하는 경우(오리지널 제조사가 복제약제조사에 대가를 지불하여 시판을 지연)와 반대의 경우(제네릭 제조사가 오리지널 제약사에 대가를 지급한 후 특허권 만료 이전에 시판하여 독점력을 획득)를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

캐나다 3. CCB, 시지남용 건에 대해 최초로 금전적 제재 동의의결

(정리 : 홍수진 사무관)

- (개요) Reliance Comfort사*는 시지남용 행위에 대해 최초로 총 5백만 캐나다달러(약 48억원)의 행정제재금(Administrative Monetary Penalty)²⁾을 납부하겠다는 동의의결안에 합의('14.11.6.)

* 캐나다 온타리오 주 소재 가정용 보일러렌탈 서비스 업체

- (행위사실) 캐나다 경쟁총국은 Reliance Comfort사가 렌탈서비스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하여 타사 서비스로의 전환을 어렵게 하였다고 판단하여 조사개시('12.12.)

* 렌탈서비스 해지 전 사전 승인 요구, 서비스 해지 요청을 접수한 중간 공급업자와의 거래 거부, 서비스 해지 가능 기간 제한 및 보일러 반환 장소 제한 등

- (조치내용) 경쟁총국과 Reliance Comfort사는 ① 렌탈서비스 해지 절차 간소화, ② 총 5백만 캐나다달러의 행정제재금(AMP) 납부 및 경쟁총국에 50만 캐나다 달러의 조사비용을 지불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의의결안(consent agreement)에 합의

- 캐나다 경쟁당국은 '08년까지 시지남용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부과권한이 없었으나, '09년 경쟁법(Competition Act) 개정으로 시지남용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금(AMP) 부과가 가능해짐

- (평가) 캐나다 경쟁총국이 시지남용 행위에 대해 최초로 금전 제재(AMP)를 부과한 사건으로서 금전적 제재를 통해 경쟁법 위반 억지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 출처 : 캐나다 경쟁당국, "Competition Bureau Strengthens Competition in Ontario's Water Heater Industry"('14.11.6.)
GCR, "C\$5 million penalty for dominance first in Canada"('14.11.7)

2) 경쟁법의 준수를 촉진·장려하기 위해 부과하는 민사적 제재수단(civil penalty)의 일종으로, 의무반에 대해 부과하는 우리나라의 과징금과는 구별됨

E U



EU 1. 기업결합 신고 간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리 : 류수정 사무관)

1. 개요

- EU 집행위는 기업결합 신고에 따른 기업 부담 절감과 심사 효율화를 위해 간이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신고 정보를 간소화 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 개정

* 간이심사 절차 규칙(the notice on simplified procedures) 및 기업결합 집행규정(the merger implementing regulation), 시정방안 제안 양식(standard commitments texts)

- 개정된 규정들은 기업결합심사의 법적 근거인 기업결합 이사회 규정(Council Regulation NO 139/2004)의 하위 규정들로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13. 3월 ~ '13. 12월)을 거쳐 확정, '14. 1월부터 시행 예정

2. 주요 내용

가. 간이심사*가 적용되는 기업결합 범위 확대

*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로 EU 집행위는 시장조사(market investigation)없이 당해 기업결합을 승인

- 기업결합 당사회사들의 관련시장 내 시장점유율 기준을 완화

- ① (수평결합) 기업간 시장점유율 합계: 현행 15% 미만 ⇒ 개정 20% 미만
- ② (수직결합) 기업 각각의 시장점유율: 현행 25% 미만 ⇒ 개정 30% 미만
- ③ 당사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20-50% 범위에 해당하는 수평결합 일지라도,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가분이 작은 경우 (HHI 증가분 150 이하)도 간이심사 대상에 포함

☞ 전체 신고건 중 간이심사 대상 기업결합의 비율이 현행보다 10%p 증가한 60-70%가 될 것으로 추산되며, 기업들도 신고를 위한 내부업무 감소 및 법률 자문서비스 비용의 30% 절감을 전망

나. 경쟁당국에 제출하는 신고 정보의 간소화

- ☐ 일반 기업결합 신고양식과 간이심사 대상 기업결합 신고양식에서 불필요하게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었던 항목 조정
 - 동 기업결합으로 영향받는 시장 각각에 대한 상세 분석자료 등 부담이 크고 실제 활용되지 않는 자료 제출 의무 삭제
 - ☐ 기업결합 신고 시 특정 정보제출 의무에 대한 면제(Waiver)를 요청하거나 간이 심사 대상 여부에 대해 EU 집행위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전 컨설팅(pre-notification) 활용을 권장
 - ☐ 기업결합 당사회사가 당해 기업결합 심사 관할권*에 이견이 있어 EU 집행위에서 회원국 경쟁당국으로 이관(또는 그 반대)을 요청하는 경우, 당국에 제출하는 양식의 정보를 최소화
 - 계열회사 소유 및 지배력, 영향받는 시장에 대한 분석 등을 삭제하고 기업결합의 개요, 영업활동 상황 및 매출액 등만을 요구
- * 사업자 각각의 EU내 매출액이 2억5천만 유로를 초과시(특정국 내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2/3를 초과하지 않아야함), EU에 신고하고 미 충족시 EU 회원국 경쟁당국에 신고

☞ 신고절차 간소화로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시장상황이 명료한 기업결합의 경우 기업의 신고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보이며 Pre-notification process*에서도 시간·비용의 절감이 전망됨

* 신고 전 제출 서류 등에 대하여 기업이 EU 경쟁총국과 상담하는 과정

다. 표준 시정방안(commitments) 제안 모델 개정

- ☐ 기업 결합이 경쟁제한적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활용되는 자산 매각 방안, 시정방안 이행 감시인(trustee)의 기능·의무 등에 관한 내용을 보완
- ※ 동 표준 시정방안 모델은 EU 경쟁총국이 2008년에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기업결합 당사회사들이 준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

EU 2. EU 경쟁총국, 제약사간 역지불합의에 과징금 부과

(정리 : 강승빈 사무관)

□ (개요) EU는 美 제약사 존슨 앤 존슨(J&J)과 스위스 노바티스(Novartis)간 역지불합의 (pay for delay)에 대해 총 €1,630만의 과징금 부과('13. 12. 10일)

- J&J는 '05년 특허가 만료되는 펜타닐*의 복제약을 노바티스가 네덜란드에 출시하려 하자 이를 지연하는 대가로 금전지불('05.7월)

* 펜타닐(Fentanyl)은 진통제와 마취제로 쓰이는 약으로 J&J가 '60년대 개발

□ (내용) J&J와 노바티스간 복제약 출시지연 합의가 유지된 총 17개월 동안 네덜란드 환자들은 약 30%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했고 일부 비용은 의료보험으로 전가되어 국민들의 세금부담도 증가

- J&J는 노바티스와 공동 판촉 협정*(co-promotion agreement)을 맺고 다른 제약사가 복제약을 출시한 '06.12월까지 합의 유지

* 노바티스는 네덜란드 시장 진출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기업이 복제약을 출시하지 않는 한 1개월마다 J&J로부터 대가를 지불받기로 함

□ (조치) EU 경쟁총국은 동 행위를 카르텔로 판단하고 J&J에게 €1,080만, 노바티스에게 €550만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제약 분야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 의지를 표명

- 알무니아 EU 집행위 부의장은 “제약분야의 경쟁보호는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정책의 최우선순위”라고 발언

※ EU는 '13년 6월에도 덴마크 Lundbeck 등 제약사들간 항우울제 복제약 출시 지연 합의에 대해 총 1억 4,500만 유로(약 2,000억원)의 과징금 부과

□ (시사점) 역지불합의 제재를 통한 제약분야 경쟁 활성화는 복지강화와 경제활성화 모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복제약품 출시 경쟁은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동일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며, 고령화 등으로 공공의료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유지하는데 기여
- 또한 복제약품 출시를 통한 경쟁의 활성화는 제약사들에게 연구개발투자 및 신약 개발노력을 위한 유인을 제공

EU 3. 소수지분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계획

(정리 : 조의제 사무관)

- (개요) EU집행위는 지배권취득에 이르지 않는 지분취득(소수지분취득)을 했으나 경쟁제한성이 있는 경우라도 신고의무가 없었던 기존제도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합병에 관한 이사회규칙(139/2004호) 개정 검토중
 - 현행 규정은 지분율 기준은 없고 합병 등을 통해 다른 기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배권(control)을 획득하는 경우에만 적용(제3조 제1항)
 - * 한국의 경우 상장회사 15%, 비상장회사 20% 이상 지분취득시 신고의무 부과
- (개정이유) 소수지분취득을 통해서도 단독효과(unilateral effects)나 협조효과(coordinated effects)를 통해 경쟁제한의 가능성이 존재
 -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등 EU 내 주요국 경쟁당국들은 소수 지분취득에 대해 M&A심사를 하고 있음
- (진행현황) EU집행위는 개정안에 대한 공개의견수렴절차를 거쳤으며('13.6월-9월),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가 진행중
 - 소수지분취득에 대한 사전(ex ante)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 또는 EU집행위가 선별해서 심사하는 방식(selective system)을 검토중
 - 신고대상도 양적기준(예 10%이상 지분)이나 실질적 영향력 기준을 사용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 중
- (향후계획) EU집행위는 2014년 6월경 그 간에 논의된 내용을 반영한 백서(white book)을 발간할 예정임
 - 오는 10월 알무니아 집행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므로 그 이전에 개정안 초안을 확정하여 다음 내각에 이전 예상
- (평가 및 시사점) 동 규정의 개정추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개정내용 전파 등의 대응 필요
 - 동 제도 도입시 우리 기업이 EU기업에 대한 소수지분 취득시 기업결합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음

※ 출처 : http://ec.europa.eu/competition/consultations/2013_merger_control/index_en.html

EU 4. 삼성전자와 모토로라의 표준필수특허 남용행위 제재

(정리 : 강승빈 사무관)

□ (개요) EU 경쟁총국은 삼성전자와 모토로라의 휴대폰 관련 표준필수특허* 남용 사건을 각각 동의를결과 금지명령으로 종결(4.29)

*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 SEP) : 산업의 표준이 되는 특허로서 기술개발이 빈번한 산업에서 호환성(interoperability) 증진을 위해 표준으로 설정된 특허

1. 삼성전자 표준특허 남용사건 : 동의를결(commitment decision)

□ (협약내용) 삼성전자는 표준필수특허를 허락없이 사용한 경쟁사업자로 하여금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판매금지청구)하고 특허 사용희망 기업에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

○ FRAND*조건에 따른 협상의사가 있는 표준필수특허 사용 희망자(willing licensee)인 애플에 대한 삼성전자의 판매금지 청구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EU조약 제102조)에 해당

*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terms) 조건 : 표준필수특허 보유자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공정한 조건으로 특허사용 제공의무 부담

- 표준필수특허를 무기로 특허사용 희망기업에 대한 과도한 로열티를 부과하는 행위는 제품가격 인상 등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이익 저해

□ (경과) EU측의 조사착수('12.1.)와 심사보고서 발송('12.12.)이후 삼성은 합의종결을 요청하고('13.5.) 시정방안을 EU에 제시('13.9.)

□ (시정방안 내용) 삼성전자가 제시한 다음의 시정방안을 EU경쟁
총국 측이 수용하여 동의를결한 최종 확정

- ① 삼성전자가 제시하는 라이선스 체결절차*에 동의한 기업에
대해 EU지역에서 향후 5년간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관련 표
준필수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청구 제기 금지

* 최대 12개월간 협상기간을 가진 후, 그 기간동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법원 또는 중재재판에 의해 라이선스 조건을 결정

- 다만 상대방이 삼성에 대해 자사의 표준필수특허 침해를 이유로
판매금지를 청구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판매금지청구 가능

- ② 시정방안 이행감시인(monitoring trustee)를 선임하여 이행을 감시

2. 모토로라 표준필수특허 남용사건 : 시정명령(prohibition decision)

□ (협약내용) 모토로라는 FRAND 조건에 따른 협상의사가 있는
애플에 대해 독일법원에 판매금지를 청구(삼성전자의 협의와 유사)
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EU 기능조약 제102조)

□ (경과) EU측은 애플의 신고에 의해 조사에 착수('12.4.)하였으며
'13.5월 모토로라에 심사보고서를 발송

□ (조치내용) 애플 등 협상의사가 있는 특허사용 희망자에 대한
기존 판매금지청구 중단 및 신규 판매금지청구 금지 명령

※ 표준필수특허남용에 대한 EU 경쟁총국 또는 EU 법원의 결정이 없었으며
회원국 법원들이 상반된 판결을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음

< 참조 : 美 FTC의 모토로라 표준특허 남용사건('13.7.24.) 결과 >

□ 美 FTC는 모토로라의 모바일 핵심 특허권의 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분쟁은 중재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동의명령을 내림

- ① 모토로라에게 FRAND 조건을 준수할 것을 요구

- ② 모토로라의 표준필수특허권을 허락없이 사용한 경쟁사업자에 대한

판매금지신청 행위를 금지

- ③ 특허사용계약과 관련하여 모토로라와 경쟁사업자간 계약조건에 합의하지 못하는 등 분쟁이 생길 경우 중재를 통해 해결

3. 남용행위 판단기준 및 시사점

□ (남용행위 판단기준) EU 측은 표준필수특허의 남용에 대해 특허권자와 특허사용 희망자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

- ① 금지청구(injunction)는 특허 침해에 대한 적법한 해결수단임
- ② 다만, 특허권자가 FRAND 조건에 따라 특허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특허사용 희망자가 이에 따른 협상의사를 밝힌 경우, 특허사용 희망자에 대한 금지청구 제기는 특허남용에 해당

□ (시사점) EU 측에서 제시한 표준필수특허의 남용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다른 경쟁당국·기업들도 참고*할 것으로 예상

* 알무니아 위원 발언 요지 : “삼성의 동의의결안은 EU 경쟁법에 부합하는 특허분쟁해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산업분야에도 이와 유사한 특허분쟁해결 절차를 도입하도록 독려할 것”(4.29)

⇒ 공정위도 향후 표준필수특허의 남용여부를 판단할 때 EU가 제시한 동 기준을 참고 필요

※ 출처 : EU 경쟁당국 홈페이지, “Commission accepts legally binding commitments by Samsung Electronics on standard essential patent injunctions” (’14.4.29.) 등

EU 5. 경쟁법 위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지침 의회 통과

(정리 : 김이영 사무관)

1. 개 요

- 유럽의회는 EU경쟁법 및 회원국의 국내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관한 지침(Directive on antitrust damages actions)을 승인(4.17)
 - 통과된 지침은 수주내로 이사회의 채택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이후 회원국들은 2년 내에 지침에 맞게 국내법을 개정해야 할 의무를 부담

2. 주요 내용

가. 회원국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용이하게 하는 장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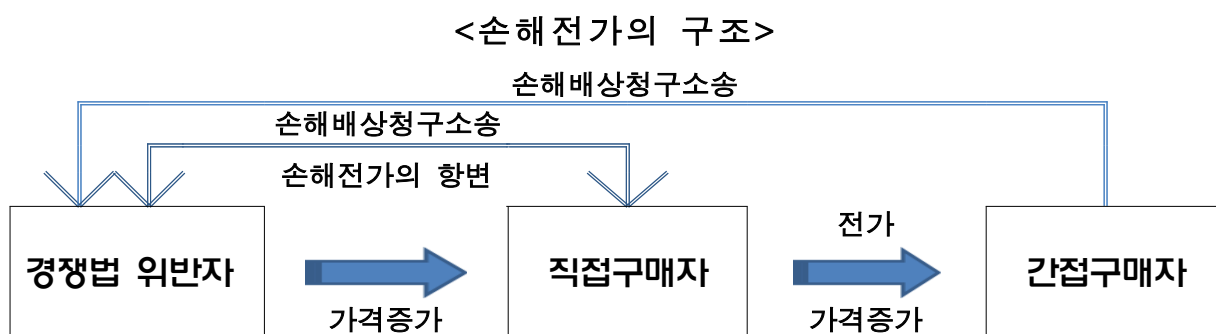
- (증거의 공개) 소송당사자가 요청시 회원국 법원은 당해 소송과 관련있는 특정 정보에 한해 공개명령 내릴 수 있으며 이는 비례 원칙에 부합해야함(지침 제5조)
 - 단, 리니언시 기업진술서, 화해절차에서 제출된 서류는 공개할 수 없으며, 경쟁당국이 조사 중 획득한 정보 및 경쟁당국의 조사를 위해 준비된 정보는 조사 종료 후에야 공개 가능(지침 제6조)
- (손배소송의 시효)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시효는 피해자가 경쟁법 위반행위 인지 시 개시되고, 최소 5년 이상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경쟁당국의 조사 진행 중인경우 시효는 일시 중단됨(지침 제10조)

나. 경쟁법 위반행위의 피해자 실질적 권리구제 강화

- (손해의 범위) 손해는 실제 손해(actual loss), 이익 손실(profit loss), 손해발생시점부터 배상일까지의 손해액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는 피해자의 완전보상권(right to full compensation)을 보장(지침 제2조)

- (손해전가 인정) 범위반자가 직접구매자의 소제기에 대응하고 실제로 피해를 입은 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 위반자에게 손해전가의 항변권*을 부여(지침 제12조)

* 손해전가의 항변(passing-on defense) : 직접구매자가 경쟁법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가격인상분(overcharge) 전부 또는 일부를 하위 유통단계의 간접구매자에게 전가하여 손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구매자의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경쟁법 위반자의 항변



- 간접구매자의 손해 발생 입증부담 완화(지침 제13조)

○ 경쟁법 위반행위에서 비롯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간접구매자는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구매자의 가격에 부당한 가격인상분이 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전가가 추정됨(rebuttable presumption)

- (손해발생 입증책임 전환) 카르텔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추정 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의 손해발생 입증책임을 전환(지침 제16조)

○ 또한, 회원국은 손해액(quantification of harm) 산정시 과도한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 요구할 수 없음

다. 손해배상소송과 경쟁당국 법집행의 조화

- (국내 판결의 효력) 회원국 경쟁당국이나 법원의 경쟁법 위반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경우 동일한 사안으로 제기된 민사상의 손해 배상청구소송에서 이에 반하는 판결을 내릴 수 없음(지침 제9조)

- (연대책임의 예외) 경쟁법 위반자에 대한 연대책임(joint and several liability)은 인정하나, 리니언시제도의 과징금 전액 면책자(immunity recipient)의 연대책임은 일부 면제(지침 제11조)

라. 소송외 분쟁해결방식 촉진 장치 마련

- (소송외 합의 촉진) 합의(consensual dispute resolution)절차 진행시 시효정지, 연대책임 예외를 인정하여 소송 외 해결 촉진(지침 제17·18조)
 - 특히, 연대채무자 중 일부만 합의시 합의하지 않은 채무자는 합의한 채무자의 책임을 제외한 잔여분에 대해 연대배상책임을 지며, 합의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가 불가
 - 합의하지 않은 채무자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합의한 채무자들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짐

3. 평가 및 시사점

- 회원국간 손해배상법제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경쟁법 위반행위 피해자의 피해구제가 용이해짐
 - 동 지침의 제정으로 EU회원국 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

※ 출처 : EU, “Commission welcomes parliament vote to facilitate damages claims by victims of antitrust violations” (’14.4.17.) 등

EU 6. 경쟁총국, 강철 연마재 업체의 담합 제재

(정리 : 김이영 사무관)

□ (개요) EU경쟁총국은 Ervin(美-英) Winoa(佛)등 4개 강철연마재 업체간 가격 담합에 대해 총 €3,070만의 과징금을 부과('14.4.2)

- 이는 카르텔화해절차(settlement procedure)*에 합의한 4개 업체에 대한 결정이며, 미합의한 1개 업체(Pometon S.P.A)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 중

* 카르텔화해절차 : EU경쟁총국의 담합행위 조사시 최종 결정 전에 업체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당국이 이를 수락하는 경우 조사를 조기 종결하고 이에 참여한 업체들에 대해 벌금을 감경시켜주는 제도

** 카르텔화해절차는 경쟁총국이 업체들의 담합혐의를 입증한 후에, 담합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업체에게 벌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인 반면, 리니언시 제도는 경쟁총국이 담합혐의를 입증하기 전에, 담합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업체에게 벌금 면제 및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인 점에서 구별됨

□ (내용) Ervin, Winoa, Metalltechnik Schmidt, Eisenwerk Wurth는 지난 6년('03.~'10.)간 가격 담합을 실시하여 연관 산업의 투입 비용 상승을 초래

- 이들은 담합을 통해 유럽시장의 강철연마재 가격을 협의하고, 추가 요금(energy surcharge)을 부과하며, 개별 소비자 대상 가격 경쟁을 금지함
- 특히, 2008년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자 생산가의 40~50%에 달하는 추가요금을 일시에 부과하여 소비자에게 비용상승분을 전가

□ (조치) EU경쟁총국은 Winoa, Metalltechnik Schmidt, Eisenwerk Wurth 등 3개사에 대해 카르텔혐의로 총 €3,070만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Ervin은 자진신고(leniency)로 과징금을 면제 받음

- EU경쟁총국은 기업들이 카르텔화해절차(settlement procedure)를 이용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10% 감면*

* EC 위원회 규정(Commission Regulation no. 622/2008 of 30 June 2008)에 따라 카르텔 화해절차에 합의한 업체에 대해 동일한 비율(10%)로 과징금 감면

<담합에 가담한 업체 및 과징금액>

업체	과징금 감면율	과징금액(€)
· Ervin (US-UK)	100%(리니언시)	0
· Winoa(France)	10%(화해절차)	2,756만
· Metalltechnik Schmidt(Germany)	10%(화해절차)	207만
· Eisenwerk Wurth(Germany)	10%(화해절차)	106만
· 총 합계		3,070만

□ (평가) 카르텔화해절차가 이용된 13번째 사례로 신속한 조사 및 과징금 감면 혜택이 제공되어 그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동 제도로 조사당국의 카르텔 조사가 용이해지고 기업들이 신속한 조사 및 벌금 감경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출처 : EU경쟁총국, “Commission fines producers of steel abrasives €30.7 million in cartel settlement” (’14.4.2.) 등

EU 7. 경쟁총국, 쿠라레이의 듀퐁 GLSV 영업양수 조건부 승인

(정리 : 홍수진 사무관)

- (개요) EU경쟁총국은 화학제품 제조사인 쿠라레이(Kuraray)의 듀퐁(DuPont) Glass Laminating Solutions/Vinyls* (이하, GLSV) 사업부문 영업양수 건에 대해 일부 생산시설 매각을 조건으로 승인('14.4.29.)

* 안전유리용 PVB필름과 건축·자동차용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인 VAM을 주로 생산하는 사업부

- (행위사실) 쿠라레이는 듀퐁의 GLSV 사업부문 자산 취득 계약을 체결('13.11.)하고 EU경쟁총국에 신고('14.3.6.)

- (조치내용) EU경쟁총국은 동 기업결합이 EEA* 내 PVB 필름** 시장에서의 경쟁자를 기존 3개에서 2개로 줄여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인상을 야기할 잠재적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

* EEA(European Economic Area) : EU의 28개 회원국 중 27개국과 EFTA의 4개 회원국 중 3개국(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노르웨이)으로 구성된 유럽경제 구역으로, 상품·서비스·인력·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하는 단일통합시장

** PVB 필름은 건축 및 자동차 산업에서 라미네이트 안전 유리 중간막으로 쓰이는 소재

- 이에 대해 쿠라레이는 GLSV의 건축용 PVB 필름 주요 생산공장*을 매각하겠다는 시정방안(commitment)을 제시(4월 초)

* 독일 북서부에 위치한 공장으로 EEA 내 판매되는 건축용 PVB 대부분을 생산

- EU경쟁총국은 당사자가 제안한 방안이 경쟁제한성을 제거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시정방안 수용

□ (평가) 기업결합 분야에서 동의를결이 갖는 실효성을 재확인

- 올해 들어 두 번째 EC경쟁총국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건으로 EC 등 선진당국은 기업결합 심사시 기업의 시정방안을 수용하는 동의를결(commitment decision)을 활발히 활용

※ EC경쟁총국은 2000년 이후 연평균 10건 이상의 M&A 심사사건을 시정방안 수용을 통해 해결

※ 출처 :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approves acquisition of chemical company Dupont's GLSV business by rival Kuraray, subject to conditions"* ('14.4.30.)

EU 8. EU 경쟁법 위반 카르텔 기업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확대 판결

(정리 : 홍수진 사무관)

- (개요) EU 사법재판소(ECJ)는 카르텔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이 카르텔로 영향을 받은 가격을 고려하여 가격을 결정했을 경우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카르텔 가담기업에게 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판시(6.5.)
- (사건경위) 오스트리아 연방 철도회사의 자회사인 OBB-Infrastruktur AG (이하 OBB)는 카르텔*에 가담하지 않은 제 3기업으로부터 엘리베이터 등을 구매하였으나, 카르텔 가담기업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 제기

* (사건 개요) EU 경쟁총국은 Kone, Otis, Thyssenkrupp, Schindler 등 4개 사의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 및 유지서비스 관련 카르텔에 대하여 992백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07)

- OBB는 카르텔에 가담하지 않은 제 3기업이 카르텔로 형성된 가격을 고려해, 정상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엘리베이터를 판매하여 180만 유로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 오스트리아 대법원은 카르텔 가담기업의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EU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요청('12.12.)
- (판결내용) EU 사법재판소는 카르텔 가담기업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 카르텔의 영향을 받아 카르텔에 가담하지 않은 제 3기업이 가격을 인상했을 수 있고, 이 가격 인상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카르텔 가담기업에 배상 청구할 수 있음

- 시장가격은 가격 결정의 주요 요소로서, 카르텔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은 카르텔로 인해 왜곡된 시장가격을 참고하여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umbrella pricing)*할 수 있기 때문

* 우산 가격 결정(umbrella pricing) : 독점 가격 수준의 가격을 책정하는 가격 설정 전략. 카르텔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은 카르텔로 인해 정상 가격보다 높은 수준의 가격을 설정하게 됨

□ (시사점) 카르텔 가담기업과 직접적 거래가 없는 피해자에 대해서도 카르텔에 가담한 기업에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EU의 최초 판결

- 경쟁법 위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지침(Directive on Antitrust Damages Actions)의 도입('14.4.)과 더불어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보다 활성화될 전망

※ 출처: GCR, "*Cartelists can be sued for umbrella pricing, says ECJ*"('14.6.5.) 등

EU 9. 경쟁총국, 카르텔 안전지대규정 개정

(정리 : 조의제 사무관)

□ (개요) EU 경쟁총국은 2001년 제정한 카르텔 안전지대규정(De Minimis Notice)*을 개정(2014.6.25.)

* Notice on agreements of minor importance which do not appreciably restrict competition under Article 101(1) of the TFEU(De Minimis Notice)

○ 안전지대 규정에 따라 사업자간에 이루어진 사소한 합의(minor agreements)*는 EU기능조약(TFEU) 101조 제1항(카르텔 금지)의 적용이 면제되어 왔으며, 금번에 일부조항 개정

* 실제적, 잠재적 경쟁자간의 합의로서 시장점유율 합계가 10% 미만이거나 비경쟁자간의 합의로서 시장점유율 합계가 15% 미만인 경우

□ (개정배경) 경쟁제한성 판단 시 합의의 목적(object)을 중시한 Expedia Case(C-226/11, 2012.2)*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결취지를 반영

* 2004년 미국 온라인 여행사 Expedia와 프랑스 철도회사인 SNCF가 승차권 판매 확대를 위해 설립한 합작회사(Agence VSC)에 대해 프랑스 경쟁당국이 101조 1항 위반으로 판단하였고 Expedia측은 안전지대 요건을 충족한다며 이의제기

○ ECJ는 반경쟁적인 목적을 가진 합의는 그 구체적인 효과와 관계없이 그 성격상 경쟁을 상당히 제한하기 때문에 안전지대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판시(2012.12)

□ (주요 개정내용) 2001년 고시에 규정된 접근방식과 원칙들은 대부분 유지하되, 안전지대 적용제외 대상을 명확히 함

○ 경쟁을 저해, 제한, 왜곡하는 목적(object)을 가진 합의에 대해서는 안전지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

○ 안전지대에 해당하는 사업자간의 합의라 해도 안전지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성제한(hardcore restrictions) 합의의 범위를 확대

- 기존고시에서는 안전지대가 적용되지 않는 경성제한 합의의 유형에 대해 고시에서 직접 열거

예) 경쟁사업자간에 가격고정, 생산량·판매량제한, 시장·고객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거나, 비경쟁사업자간에 구매자의 판매가격 결정권 제한, 구매자의 판매지역제한 등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경우

- 개정된 고시는 현재 또는 미래의 일괄면제규정*에서 열거된 모든 경성제한을 안전지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 일괄면제규정은 수직적 합의,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 R&D, 보험, 중소기업, 항공운송 분야 등에 있으며 각각의 일괄면제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성 제한에 관한 합의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101조 제1항의 적용이 면제됨

<주요 개정내용 비교>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안전지대 요건 (점유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사업자간 : 10%미만 ○ 비경쟁사업자간 : 15%미만 	좌 동
안전지대 적용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성제한에 관한 합의(열거)는 적용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사업자간 : 가격고정 합의, 생산량·판매량 제한 합의, 시장·고객분할에 관한 합의 - 비경쟁사업자간 : 구매자의 판매가격 결정권 제한, 판매지역제한에 관한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CJ판례를 인용하여 목적에 있어 경쟁제한적인 합의는 안전지대 적용이 제외된다는 사실 명확히 규정 * 경성제한에 해당하더라도 상당한 효과가 존재할 경우에만 101조가 적용된다는 판례(Volk v Vervaecke 등)와 경성제한의 경우 안전지대 적용이 제외된다는 기존 고시간의 충돌을 해소 ○ 현재 및 미래의 일괄면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경성제한에 관한 합의는 안전지대 적용제외

EU 10. 집행위, 구글의 반독점행위 조사 지속을 암시

(정리 : 김이영 사무관)

- (개요) 호아킨 알무니아(Joaquin Almunia)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구글의 디지털시장 내 반독점행위 조사를 지속할 것을 암시*

* Chatham House Competition Policy Conference 2014('14.6.30.)

- 최근 구글 사건*은 디지털 시장에 대한 반독점법 집행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언급하며, 추가 쟁점 사항을 제시

* < 참고 :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 관련 사건 개요 >

- EU 집행위는 구글이 ① 제3자 소유 콘텐츠 무단 도용 ② 구글 광고주에 독점 계약 강요 ③ Adwords 호환성 제한 ④ 타사의 검색결과와 자사의 검색결과를 차별적으로 대우한 행위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발표('13.4.)했으며, 이에 대해 구글이 제시한 자진시정방안을 수락함('14.2)

* 해외경쟁정책동향 제73호('12.6.11), 제81호('13.5.20) 참고

- (주요내용) 부위원장은 EU 집행위에 구글과 관련해 제기된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개별 사안별로 조사할 것임을 언급

* 구글 관련 EU 집행위에 제기된 사건

- | |
|--|
| · 안드로이드시스템의 경쟁 제한 여부 |
| · 검색엔진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구글의 다른 서비스(Google+, YouTube) 지원 |
| · Adwords(경매 통한 광고 구역 배당) 및 Adsense(웹사이트 광고 게재)*의 약관 |
| · 제3사이트 이미지 무단 사용 |
| · 유튜브 스트리밍 서비스관련 구글에 유리한 계약 체결토록 음반사 압박 |

※ Adwords는 구글의 검색 광고 플랫폼으로 광고주들은 Adwords를 통해 구글 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음. Adsense는 웹사이트 운영자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구글 광고를 게재하여 수익을 얻게 하는 프로그램

- 현재 집행위에서 가장 진행이 빠른 조사는 안드로이드 시스템의 경쟁 제한 여부*로, 현재 사실관계 확인 단계에 있음

* Fair Search Coalition(Microsoft, Nokia, Expedia, Oracle, TripAdvisor를 포함한 17개 검색 전문 기업의 연합)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의 지배력을 이용해 모바일 시장을 독점화하고 있다며 소장을 제기함('13.4)

- 그 외 사건들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을 언급하지 않음

- (평가) EU 집행위의 구글 관련 향후 조사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향후 구글의 대응 및 집행위의 조사 동향을 주시할 필요

EU 11. EU 집행위원회 인사 동정

(정리 : 조의제 사무관)

- (개요) 2014년 11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신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에 Margrethe Vestager 전 덴마크 부총리가 내정(9. 10)

* EU집행위원회는 위원장 외에 회원국 별로 1명씩 총 28명의 집행위원으로 구성되며,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카르텔 등 경쟁법 사건의 처리에 책임을 지게 됨

- Vestager 후보자는 고위관료와 정치경력을 골고루 거치면서 강한 업무 추진력과 협상력을 보유한 인물로 평가됨

- (주요이력) 전 덴마크 사회자유당 당대표로 덴마크 부총리 및 경제부장관, 교육부 장관 등 역임

< 참조 : Margrethe Vestager 상세 이력 >



- 코펜하겐 대학 경제학 석사(1993)
- 2011~2014 ; 덴마크 경제부 장관, 부총리
- 2000~2001 ; 덴마크 교육부 장관
- 2011~2014 ; 덴마크 사회자유당 당대표
- 2001~현재 ; 덴마크 사회자유당 국회의원
- 1998~2000 ; 교육부, 종무(Ecclesiastical) 장관

- (전망) 사건처리에 있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면서도 일부 언론에서는 ‘독선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만큼, 강경한 집행이 예상

- 피조사기업과의 합의종결방식을 선호했던 전임 Almunia 집행위원과는 달리 피조사기업에 대한 접근 방식이 보다 강경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EU진출 우리나라 기업은 경쟁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

※ 출처 : GCR, "Denmark's Vestager given competition job in reorganised commission" ('14.9.10.) 등

EU 12. 신임 집행위원, 경쟁법 집행 방향로이터 인터뷰 내용 요약

(정리 : 홍수진 사무관)

□ (개요) 차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방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9.23.)

* EU 집행위 신임 경쟁담당 집행위원으로 Margrethe Vestager 전 덴마크 부총리가 내정(9.10.)

□ (법 집행 방향) 최근 세계 각 국에서 경쟁법을 자국 기업 보호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EU는 이를 배제하고 철저히 EU 조약에 근거한 법 집행을 약속

○ EU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거대 기업들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경쟁이 치열해지는 현 상황에서 보호주의는 적절치 못한 방법이라 반박

-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으로부터의 보호(cushioning from competition)가 아니라 경쟁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

- 또한, 경쟁법 상 문제는 기업의 규모가 아닌 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므로 단지 거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규제하기는 어려움

□ (사건처리방식) 최종 결정 전 settlement*를 통한 사건처리에 호의적

* 합의 또는 협상으로 번역되며, 카르텔에 한해 EU경쟁당국이 발견한 일부증거에 기초해 사업자가 책임을 인정하고 과징금의 10%를 감면받는 제도로서, 법적 구속력 있는 이행약속을 받고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인 Commitment(미국의 consent decree)와는 차이가 있음

- 합의종결절차는 수년간 지연되고 있는 사건을 종결시키는 등 절차 신속화를 통해 공정하고 강한 경쟁의 보호에 기여한다고 평가
- (시사점) 보호주의적 법 집행을 배제하는 것이 곧 외국 기업에 대한 경쟁법 집행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EU 진출 우리 기업은 경각심을 갖고 대비할 필요
 - 피조사기업과의 합의종결방식을 선호했던 전임 Almunia 집행위원 때와 같이 사건처리 시 합의종결방식의 활용이 여전히 활발할 것으로 전망

※ 출처 : Reuters “New EU antitrust head not swayed by anti-Americanism, bullies” (‘14.9.23.)

EU 13. Facebook의 WhatsApp 인수 승인 결정

(정리 : 홍수진 사무관)

- (개요) EU 집행위원회는 Facebook의 WhatsApp 인수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승인 결정('14.10.3.)
- (경과) Facebook(美)*은 WhatsApp(美)**를 190억 달러에 인수할 계획을 발표('14.2.)하고 EU 경쟁당국에 신고('14.8.29.)

* PC와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는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플랫폼인 Facebook,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Facebook Messenger, 사진·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Instagram 및 온라인 광고란을 운영하는 사업자

** 한국의 카카오톡과 유사하게 스마트폰 앱 형태의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결정이유) 관련시장을 ①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시장, ② SNS 시장, ③ 온라인 광고시장으로 확정하고, 동 기업결합은 이들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
 -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시장) 두 사업자는 밀접한 경쟁관계(close competitor)에 있지 않으므로 경쟁제한성 없음
 - Line, Viber, Telegram 등 경쟁관계에 있는 앱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용자들은 하나의 모바일 기기에서 두 가지 이상의 앱을 동시에 설치·사용 가능
 - 금번 기업결합으로 네트워크 효과³⁾가 커져 경쟁자의 시장진입이 저해된다는 우려도 있으나, 동 시장은 빠른 성장속도, 짧은 혁신주기, 낮은 신규진입 비용, 높은 대체 가능성 등 이를 완화하는 특성을 다수 보유

3) 서비스의 가치가 이용자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효과

- (SNS 시장) SNS의 범위를 어떻게 확정하는지와 무관하게 경쟁 제한 효과 미미
 - SNS 시장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메신저 서비스가 SNS와 경쟁관계에 있는지 불분명
 - 메신저 사업자인 WhatsApp을 SNS 사업자인 Facebook의 경쟁 사업자로 본다하더라도 동 분야에서 Facebook에 비해 WhatsApp의 역사가 훨씬 짧기 때문에 WhatsApp은 Facebook의 직접적 경쟁자는 아님
 - 양 사의 이용자가 상당히 중복되므로 기업결합을 통한 신규 회원 확보로 얻는 Facebook의 시장지위의 강화 효과도 제한적
- (온라인 광고시장) 경쟁제한 우려 없음
 - 동 기업결합 이후에도 Facebook이 WhatsApp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본인 동의없이 광고목적으로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WhatsApp 사용자 정보를 활용하여 Facebook이 맞춤형 광고시장*에서 자신의 지위를 강화할 가능성은 낮음

* Facebook은 SNS를 통해 수집된 사용자 정보를 분석하여 맞춤형(targeted) 광고를 제공

□ (의의) 금번 결정에는 ICT 시장의 다양한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

- ICT 시장의 빠른 변화 추세를 반영하여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승인 결정
- SNS 시장의 급격한 혁신 동향을 감안하여 SNS 시장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은 채 경쟁제한성을 판단

※ 출처 : European Commission, “Mergers: Commission approves acquisition of WhatsApp by Facebook” (’14.10.3.)

EU 14. 경쟁총국, 금융 관련 파생상품시장 카르텔 제재

(정리 : 조의제 사무관)

1. 개요

- EU경쟁총국은 JP Morgan 등 4개 금융기관*이 연루된 2개**의 금융분야 카르텔에 대해 각각 61.6백만유로와 32.3백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2014.10.21.)

* RBS(Royal Bank of Scotland), JP Morgan, UBS, Credit Suisse

** ① 스위스 프랑 표시 리보금리 기반 파생상품 카르텔 및 ②파생상품시장에 적용되는 매매율차 (Bid-ask spreads) 카르텔

2. 행위사실

- (스위스 프랑표시 리보금리 카르텔) RBS와 JP Morgan은 2008.3 2009.7월 기간 동안 스위스 프랑으로 표시되는 리보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금리수준을 협의 및 정보교환

* 리보(LIBOR :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금리는 런던 금융시장에 있는 글로벌 대형은행들간에 적용하는 금리로서 영국은행협회가 회원 은행들로부터 보고 받은 자료를 토대로 상위 25%, 하위 25%를 제외한 나머지 50% 은행들의 평균으로 계산하여 10개 통화에 대해 발표

- 양사는 동 기간 중 양사가 각각 제출할 스위스 프랑 리보금리 수준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외환매입액과 매도액의 차이 및 가격에 관한 정보도 수시로 교환

※ EU경쟁총국은 이미 2013.12.4. 8개 금융기관들간 유로표시 및 엔화표시 이자율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카르텔에 대해 EU 경쟁법 사건 사상 최대 금액인 17.1억 유로(2.5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음

- (매매율차(Bid-ask spreads) 카르텔) RBS, UBS, JP Morgan, Credit Suisse는 EEA* 지역내에서 스위스프랑 금리 파생상품의 매매율차(spreads)**를 거래상대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기로 합의

* EEA : EU 28개국에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가 포함

** 매매율차 : 파생상품에 대한 매도가격과 매수가격의 차이를 말하며, 이러한 차이는 고객의 입장에서 거래비용의 성격

- 동 사들은 가격결정권자로서 2007.5-9월 기간동안 자신들을 제외한 제3의 거래당사자들에 대해서는 큰 매매율차를 적용하고, 자신들간에는 소폭의 매매율차를 유지하기로 합의
- 합의를 통해 자신들은 거래비용도 줄이고 거래량을 늘려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운 반면에, 다른 경쟁자들에 대해서는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경쟁여건을 불리하게 만들

<참고 : 현재 EU집행위가 조사중인 금융분야 경쟁법 사건>

-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s; CDS*)시장에서의 카르텔 사건

* CDS : 대출금이나 채권 등 기초자산이 갖는 신용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 또는 수수료로, 채무불이행 등 신용사건발생시 기초자산에 대한 매입자의 손실을 보전 받는 안전장치

- (혐의내용) 2006-2009 기간 중 전세계 가장 규모가 큰 투자은행들 중 일부가 독일증권거래소(Deutsche Borse)와 시카고상품거래소(Chicago Mercantile Exchange)의 신용파생상품사업 진입을 방해
 - 신용파생상품사업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제스왑파생상품연합회(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ISDA)와 데이터 서비스 공급자인 Markit으로부터 면허를 필수적으로 얻어야 함
- (의의) 신용파생상품의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이러한 계약을 훨씬 저렴하게 수행할 수 있고 관련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은행들의 이러한 행태는 폐해가 큼

3. 조치결과

- (스위스 프랑표시 리보금리 카르텔) RBS는 동 카르텔의 존재를 EU경쟁총국에 자진신고하여 약 1.1억유로의 과징금을 전액 면제 받았으며, JP Morgan은 Settlement^{*} 합의, 조사과정에서 협조를 고려, 40%가 경감된 61.6백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 받음

* 카르텔에 한해 EU경쟁당국이 발견한 일부증거에 기초해 사업자가 책임을 인정하고 과징금의 10%를 감면받는 제도

- (파생상품 매매율차 카르텔) UBS 12.6백만유로, JP Morgan 10.5백만유로, Credit Suisse 9.1백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

- RBS는 리니언시를 통해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았으며, 나머지 은행들도 조사과정에서의 협조, Settlement 합의 등을 고려하여 10-30%수준의 과징금 경감을 받음

※ 출처 : GCR, "EU punishes four banks for Swiss Franc manipulation" ('14.10.21)

EU 15. EU 경쟁법 집행 10년의 성과와 과제

(정리 : 홍수진 사무관)

□ (개요) EU 집행위는 EU기능조약에 관한 집행규정* 시행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2004.5.-2013.12.)의 경쟁법 집행성과 및 향후 과제를 정리·분석한 보고서를 발표('14.9.7.)

* Regulation 1/2003 : EU 기능조약 제101조(경쟁제한적 합의·공동행위⁴금지), 제102조(시지남용금지)의 집행을 위한 세부규정으로, 국내 경쟁당국이나 국내 법원이 EU 경쟁법 규정을 직접적용(direct applicability)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

□ (사건처리 실적) 10년간 EU 집행위는 총 122건, 회원국 경쟁당국은 총 665건의 EU경쟁법 위반사건에 대해 조치(기업결합 제외)

○ (위반행위별) 집행위는 카르텔 사건에 집중한 반면(집행위 총 처리실적 중 약 48%), 회원국 경쟁당국은 시지남용규제를 최우선시(회원국 경쟁당국 총 처리실적 중 약 36%)

○ (산업부문별) 원자재·중간재 및 제조업 분야에 대한 제재에 집중(집행위 처리실적 중 약 34%)

- 통신·미디어·에너지·운송 등 최근 자유화되어 집중도가 높거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조사도 활발

○ (처리방식별) 집행위 결정유형* 중 시정조치결정(제7조)의 비율이 가장 높음(집행위 사건처리 실적 중 약 64%)

* 집행규정 상 집행위의 결정유형(제7조-제10조): 시정조치결정(termination of infringement), 임시조치(interim measure), 동의의결(commitments), 경쟁법 적용제외 결정(finding of inapplicability)

- 다만, 경성카르텔 등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건을 제외⁵하면 동의의결제(commitment decision)의 활용도가 가장 높아 집행규정에 최초로 도입된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집행위 사건처리 실적(카르텔 제외) 중 약 52%)

4) 카르텔 외에 기타 수평적 합의(구속조건부 거래, 조인트벤처 설립 등), 수직적 합의(재판가유지 등)까지 포함

5) 집행규정 Recital 13은 집행위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의결결정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규정

□ (문제점 및 향후과제) EU 경쟁총국과 회원국 경쟁당국의 사건처리 절차 및 제재권한의 차이*가 여전히 크므로, 제도 수렴을 위한 추가적 노력이 필요

* 법 집행우선순위 선정 권한 부재, 조사권한의 차이, 동의의결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 부재, 구조적 조치 권한 부재 등

※ 출처: EC, *"Ten Years of Antitrust Enforcement under Regulation 1/2003"* ('14.9.7)

EU 16. 유럽의회, 검색 서비스와 기타 사업 분리 결의안 승인

(정리 : 김이영 사무관)

□ (개요) 유럽의회는 온라인 검색 서비스와 기타 상용 서비스를 분리하는 방안의 검토를 EU 집행위에 요청하는 결의안을 승인*('14.11.27.)

* 결의안에서 구글 등 검색 엔진 업체를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EU 검색 엔진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유럽의회는 동 결의안은 강제력이 없으며, EU 집행위나 구글은 결의안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구글 사건 진행 경과) EU 집행위는 '10년 11월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

* 관련 내용은 해외경쟁동향 제79호('13.2.18), 제90호('14.7.14) 참조

○ 알무니아 前 EU 집행위원은 구글사가 세 번째로 제출한 시정방안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14.2.) 경쟁사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현재 네 번째 시정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구글과 협의 중

□ (결의안 주요 내용) 온라인 검색시장의 경쟁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검색 서비스와 기타 상용 서비스를 분리(unbundling)할 것

○ 검색시장의 경쟁 촉진 및 사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검색 엔진은 비차별적·비편향적 검색 과정과 검색 결과를 제공해야 함

○ 검색 엔진 업체는 기타 상용 서비스의 마케팅을 위해 검색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서는 안 됨

□ (평가) EU의 검색시장에 대한 강력한 경쟁법 집행 의지를 재확인

○ 이번 결의안은 강제력이 없으나 현재 EU 집행위에서 진행 중인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출처 : EU 홈페이지,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27 November 2014 on supporting consumer rights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2014/2973(RSP))*

EU 17. UAE Etihad 항공사와 이태리 Alitalia 항공사의 합작법인 설립 조건부 승인

(정리 : 김미영 사무관)

□ (개요) EU 경쟁총국은 아랍에미리트 항공사 Etihad사와 이태리 항공사 Alitalia CAI 간 합작법인(New Alitalia)설립 건을 조건부 승인('14.11.14)

- Alitalia CAI사는 합작법인(New Alitalia)에 항공사업을 양도하면서 51%의 지분을 취득하고, Etihad사는 합작법인 지분 49%를 인수

- 1) Etihad사는 아랍에미리트 국영항공사로서 아부다비 공항을 거점으로 전세계 103곳에 취항, 2013년 1,200만명의 여객을 수송
- 2) Alitalia CAI사는 이태리 항공사로서 로마 피우미치노(Fiumicino) 공항을 거점(hub)으로 운항, 2013년 2,400만명의 여객을 수송

□ (결정결과) EU 집행위는 로마-베오그라드 간 노선에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보았으나, 당사회사들이 제출한 시정방안(commitments)을 통해 경쟁제한 우려가 치유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건부 승인

- (경쟁제한성 판단근거) 로마와 베오그라드 간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는 Alitalia사와 Air Serbia사* 2개 항공사밖에 없으며 Air Serbia사의 지분 49%를 Etihad사가 보유하고 있어,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해 동 노선에 독점이 발생하게 될 우려

- 다만, 동 노선 외의 노선에 있어서는 다른 경쟁항공사들이 많이 존재하여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

* Air Serbia사는 세르비아 항공사이며, Etihad사(49% 지분 보유)는 세르비아 정부(51% 지분 보유)와 동사 경영협정(management agreement)을 맺고 있음

- (시정방안) 로마-베오그라드 간 노선에 신규 진입하는 항공사들에게 일간 2개까지의 자사의 왕복 슬롯*(two daily slot pairs)을 양도할 계획

* 공항에서 여객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시간대

- 이외에도 신규 항공사의 진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신규 항공사에게 특별운임협정^{*}(SPA: Special Prorate Agreement) 제공, 자사의 상용고객 우대제도(frequent flyer programme)^{**}에의 접근 허용 등 인센티브를 제공

* 연계운송 시 항공사 간에 이루어지는 요금/요율배분 계약으로 일반 요금 보다 낮은 특별 정산가가 제공

** 항공사의 이용빈도가 높은 고객을 우대하는 프로그램으로 마일리지 서비스를 비롯하여 항공권 업그레이드, 공항 라운지 이용 등의 혜택 제공

□ (관찰 및 유의점) 기업결합 당사회사들이 제출한 슬롯 양도, 특별 운임협정 제공 등의 시정방안이 신규 항공사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쟁촉진 수단이 되는지 여부는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

※ 출처 : GCR, “Etihad/Alitalia opens up Rome to Belgrade route in return for EU approval”(14.11.18.) 등

유럽 국가



영국 1. 영국 공정거래청(OFT) 2013-14회계년도 업무 계획

(정리 : 류수정 사무관)

※ 동 자료는 OFT의 2013-14회계년도 업무 계획으로, Enterprise Act 2002 제3조 제3항에 근거하여 '13.3.21일 의회 제출 및 홈페이지 게재

- ◇ OFT 주요 업무 : ①경쟁법과 소비자 보호법 집행, ②시장 분석 ③기업결합 심사 ④신용 및 부동산 시장 허가·감독 ⑤정보제공 등
- ◇ 경쟁당국 통합 계획 : 공정거래청(OFT)·경쟁위원회(CC)를 통합한 경쟁시장부(CMA,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가 '14.4.1일 출범 예정

1. 정책 환경

① 거시 경제 상황

- 유로존을 포함하여 전세계 경제 성장이 느리게 진행되면서 영국의 경제 전망 또한 어두운 상황
- 국민 소득 감소는 생필품 이외 상품에 대한 소비를 줄이고 금융 시장에서는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이 신용공급을 축소
- 기업 수익이 감소되면서 이를 보전하기 위해 소비자 후생을 착취하는 불공정 행위·담합 등에 대한 유인이 증가

② 경제 성장을 위한 경쟁의 역할

- 경제성장을 이끌 정책 수단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간 활발한 경쟁*은 효율성 증대와 혁신을 촉진하며 경제 성장을 촉진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불필요한 규제 개선 필요

* 경쟁은 ①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을 촉진하고 ②생산성 높은 기업의 시장 점유율 확대를 보장하며 ③혁신을 장려

③ 경쟁시장부(CMA)로의 차질없는 업무 인계 추진

- 올해로 OFT가 설립된지 40주년인 동시에 경쟁시장부(CMA)로 업무·기능 인계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충실히 준비

④ 전략적 평가 수행

- 소비자·시장에 대한 전략적 평가를 통해 이미 발생하였거나 잠재된 리스크를 파악하고 집중해야할 과제를 선정

2. 2014년도 전략 목표

미션	소비자를 위한 시장기능 최적화		
전략 목표	경쟁법 집행 효과 극대화	의사결정 절차 개선과 인적투자를 통한 성과 향상	기관 이전 지원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형잡힌 경쟁법 집행과 심도있는 기업결합 심사 ◆ 선택과 집중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 ◆ Hard한 법집행과 Soft한 법집행 병행 추진 및 대내외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결정 절차 개선 ◆ 집행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임 기관과 협력 공고화 ◆ 다양한 업무 포트폴리오 · 노하우 전수

① 경쟁법 집행효과 극대화

- 균형잡힌 경쟁법 집행과 심도있는 기업결합 심사
 - 특정분야에 대한 경쟁법 집행에 집중하기 보다는 다양하면서 균형잡힌 경쟁법 사건 포트폴리오를 유지
 - 경성 카르텔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재*로 카르텔 억제효과를 극대화
 - 시장의 경쟁이 저해되지 않도록 기업결합을 심도있게 심사

* 가담자에 대해 기소 · 이사 자격 박탈(Director Disqualification Orders) 등

- 선택과 집중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
 -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약관의 경우 영향력이 큰 사건을 타겟팅하여 억제효과 극대화
 - 거래표준청(Trading Standards Services) 및 소비자보호 파트너십(Consumer Protection Partnership)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면서 시장의 올바른 작동을 지원
 - 소비자에게 끼치는 해악에 대한 순위를 정하여 취약계층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 행위에 법집행 역량 강화
- Hard한 법집행과 Soft한 법집행 병행 추진 및 대내외 협력 강화
 - 법집행을 통해 기업의 행태 변화나 시장전반의 범위반 억지력을 제고 하는 한편 경쟁 주창, 가이드·정보 제공 등의 비구속적 조치를 통해 시장의 왜곡을 시정
 - OFT 법집행이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국내 및 국제적인 수준에서 관련 기관·이해관계자들과 협력 강화

② 의사결정 절차 개선과 인적 투자를 통한 성과 향상

- (절차 개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의사결정이 도출 될 수 있도록 내부 의사결정 프로세스 개선
 - 특정 사건 의결시 의사 결정권자와 실제 조사 수행부서를 분리하여 의사결정의 독립성·객관성 확보
 - 외부 회의·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투명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내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
- (집행 역량 강화) 경쟁시장부(CMA)로 이전되는 직원들의 조사 기법과 집행 능력이 향상되도록 정책 추진
 - ‘Enforcement Academy’에서 전문가 기술 교육과 지식 공유, 토론의 장을 제공하며, 전문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 채용

③ 기관 이전 지원

- 경쟁당국이 담당하는 소비자 정책과 금융부문(FCA)의 소비자 정책이 중복되지 않도록 금융당국(FCA)과 경쟁당국간 MOU 체결을 추진

3. 여러 분야에 걸친 주요 현안

① 공정한 선택과 경쟁에 장애물로서 악용되는 가격 문제

- 복잡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가격은 효율적인 선택 및 경쟁을 저해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잡한 가격체계가 유지
-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상품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잠재된 효과를 검토 중

② 새롭게 대두되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법집행 강화

- 지적재산권 탈취 및 신용시장과 같이 혁신적이고 새로운 시장에서 발생하는 경쟁, 소비자 관련 이슈를 검토
 - 검색 엔진이나 포털,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나 앱과 같은 디지털 상품에서 일어나는 반경쟁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 온라인 상품 판매 채널에 대한 집중 조사 실시

③ 공공 서비스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그간 건강, 교육 등 공공시장에서 과도한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 및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경쟁중립성 등 공급과 관련된 측면을 주로 조사해 왔으나
 - 수요 측면에서 소비자 피해에도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 할 예정

④ 경쟁당국과 다른 규제기관간 긴밀한 협력

- 경쟁과 소비자 관련 이슈가 증가하면서 경쟁시장부(CMA)와 타 규제기관간 협력의 필요성이 증가
- 현재 타 규제기관과 MOU 등이 작동하고 있으나, CMA 발족 후에도 주도적인 중앙 규제기관으로서 다른 규제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

(정리 조의제 사무관)

1. 배경

- ☐ OECD대사들로 구성된 OECD Council에서 2014.9.16.자로 1995년 채택한 국제협력에 관한 권고문* 개정안을 채택

* Recommendation concer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ompetition Investigations and Proceedings 2014

-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경쟁당국간 공조필요성 증가, ICT기술의 발달 등 그 간 경쟁법 집행 환경의 변화내용을 반영
- 1995년 권고문은 상대국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한 통보, 조사 당국간의 조력·협력과 공개 가능한 정보 교환 등을 규정

2. 국제협력 권고문 개정 주요 내용

가. 핵심 사항

- ☐ 비밀정보 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 규정(Waiver, Information gateway)을 도입하고 세부 절차에 관해 규정
- ☐ 조사협조의 범위에 증거 수집을 위한 조사(searches)를 추가함
- ☐ 경쟁당국간 통보방식에 종전 서면통보방식에서 이메일 등 효율적인 통신수단을 포함
- ☐ 한번도 개시된 바 없는 조정(conciliation) 조항 삭제

나. 개정의 주요 내용

☐ (정의) 협력·경쟁당국·비밀 정보·웨이버의 정의(definition) 조항 추가

- (협력의 범위) 경쟁당국간 공식, 비공식의 활동을 모두 포함
- (경쟁당국) 경쟁법과 경쟁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을 포함하되 법원은 제외
- (비밀 정보) ‘각 국 법령이나 정책에 의해 해당 정보의 공개가 금지되는 정보’를 비밀정보라 함
 - 기업의 영업 비밀이나, 통상적인 환경에서 해당 정보의 공개가 기업의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를 예시
- 웨이버(Waiver of confidentiality)는 특정 경쟁당국이 당사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기업정보를 다른 경쟁당국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당사회사의 비밀공유 동의서

☐ (조사 통보) 상대국의 중요한 이익(important interests)에 영향을 미치는 조사나 절차가 진행될 경우 이를 상대국에 통보하여야 함

- (시기 및 내용) 상대국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게 될 때, 통보 받는 측이 중요한 이익을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상세한 내용을 포함
- (담당) OECD 경쟁위에서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명부에 기재된 회원국이 요청하는 채널에 따라 경쟁당국이 수행
- (방식) 이메일 등을 포함하여 통보 당시에 이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식을 통해서 서면으로 통보

☐ (일반 정보 교환) 사건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여야 하며 사건별(case by case)로 진행

- 정보 제공국은 정보를 제공할 지 여부 및 정보 활용 상 비밀 유지 등의 조건을 달아 보내줄 지 재량을 보유
- 정보 수신국은 자국법에 따라 동 정보의 보호를 위해 제공국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음
- 일반 정보의 교환만으로 효율적인 조사를 수행하는데 부족할 경우, 웨이버를 통한 비밀정보 교환을 고려함

□ (웨이버에 따른 비밀정보 교환) 비밀 정보를 교환할 수 있기 위해 IG활용에 앞서 웨이버 활용을 장려하여야 함 (신설)

- 웨이버를 통해 정보를 취득한 경우 웨이버의 조건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함

* 웨이버는 본 권고문 개정 이전에도 실무적으로 글로벌 기업결합, 카르텔 사건에서 활용되어 왔음

- 웨이버를 통한 교환만으로 효율적인 조사를 수행하는데 부족할 경우, IG를 통한 비밀정보 교환을 고려함

□ (Information Gateway, IG에 따른 비밀정보 교환) 회원국은 IG장치* 도입 추진을 고려해야(should consider promoting) 함 (신설)

* 정보 제공자 및 이해관계자의 웨이버(Waiver) 없이도 경쟁당국 간 비밀정보 교환을 허용하는 명문화된 규정이며 현재 일본·영국·호주·캐나다·독일 5개국에 규정되어 있음

- IG에는 양국이 준수하여야 할 필수 조건과 비밀 보호 장치(safe guards)를 확보해야 함

① 정보 제공시 고려사항

i) 사건의 성격과 중요성

ii) 비밀정보의 제공이 조사목적에 적절한 지 여부

iii) 정보교환 양 당사자가 동일하거나 관련된 조사를 진행중인 지 여부

iv) 정보보호의 수준이 동등한 지 여부

② 정보 수신국의 수신정보 보호 의무

i) 교환된 정보의 기밀 유지

ii) 정보 제공국이 요구하는 기밀성 조건 충족

iii) 정보 제공국이 승인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공개 금지

③ 정보수신국의 정보 보호 절차 의무(safe guards)

i) 전자 보호, 암호 설정 등 적절한 물리적 보호 장치 설치

ii) 제한 된 범위내의 담당자에게만 정보 접근 허용

iii) 정보 활용 이후 정보 제공국에 회신 또는 폐기처분 등의 지침을 준수

iv) 수신된 정보가 유출될 경우 정보제공국에 대한 통지, 피해최소화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

□ (조사의 조력) 동일한 반경쟁적 행위 또는 기업결합에 대해 두 개 이상의 회원국이 조사하거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상호 협조하여야 함

○ 자발적 의사에 따라 가용자원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조력하되 기존의 협조 내용*에 다음 사항을 추가함

i) 요청국가를 대신하여 요청국가에게 시간적으로 차질 없이(in a timely manner)공문서가 준비(제공)되도록 함 (신설)

ii) 요청국가의 조사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증거획득을 위해 요청 국가를 대신해서 조사(searches) 수행 (신설)

* 1995 권고문에는 i)정보 제공, ii) 조력 국가 영역내에서 정보를 수집, iii) 요청 국가를 대신하여, 증언이나 서류 형태로 정보가 생산되도록 권한 행사

3. 평가 및 전망

- 금번 개정된 권고문은 경쟁법 집행에 있어 국제협력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모두 포괄하고 있어 향후 국제협력의 기본 규정이 될 전망
 - 실무적으로 활용되어온 웨이버, 정보교환의 절차 및 정보의 활용방법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
- 다만, IG 조항의 신설을 고려토록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당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 당초 우려와 달리 IG조항 도입 여부에 대해 재량권*이 있고 IG를 도입하더라도 비밀정보의 제공여부에 대해서도 상당한 재량권, 안전장치가 있음
 - * 초기개정(안)(should promote)에 비해 강제성이 크게 완화(should consider promote)되어 단기적으로는 법개정 필요는 없음
 - 국제카르텔 조사에 있어 기습조사, 웨이버를 통한 정보공유 등 기존에 비공식적으로 활용되어 왔던 협력 방법을 공식화 한 것임

프랑스 3. 프랑스 경쟁청, 가스시장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에 시정명령

(정리 : 조의제 사무관)

- (개요) 프랑스 경쟁청(Autorité de la concurrence, 이하 ‘경쟁청’)은 2014. 9. 9. 최대 규모의 가스 공급회사인 GDF Suez*가 보유한 고객정보를 경쟁사와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림

* 프랑스 가스공사(GDF)와 Suez사가 2008년 합병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천연가스, 전력의 생산, 판매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전세계 세 번째 규모의 에너지 회사

- (사건의 내용) 프랑스 가스시장의 신규진입사업자인 Direct Energie는 가스 고객정보 공유를 거부한 GDF Suez를 경쟁법 위반으로 신고(14.4월)

< 참고 : 프랑스 가스 시장 현황 >

- 프랑스 가스시장은 국영기업인 GDF Suez의 독점공급 체제였으나 2007.7월 경쟁체제를 도입한 이후 Direce Energy, EDF, ENI, Lampris 등 4개 사업자가 추가로 진입
 - 소비자들은 ① GDF Suez가 정부의 가격규제 하에 독점 공급하는 가스(공공가스)와 ② GDF Suez 및 신규사업자가 시장가격으로 제공하는 가스(시장가스)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됨
- * 공공가스 제도는 EU의 보조금 제도와 충돌 등을 이유로 16년 폐지될 예정으로 가스 공급자간의 경쟁이 극심해지고 있음
- 2013년 말 현재, GDF Suez가 독점적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 등 시장개방의 경쟁촉진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13년말 가입자수 기준으로 GDF Suez 85%, 경쟁사 15%
- (경쟁청의 판단) 경쟁청은 가스시장에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GDF Suez가 보유한 고객정보를 경쟁사와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일종의 필수설비 논리)
 - GDF Suez의 고객 정보는 자신의 노력이 아닌 제도적으로 보장된 독점력*을 이용해 수집한 정보임

- * 2007.7월 이전에는 GDF Suez만이 전체 가스 시장 독점 사업자였으므로 고객 정보를 노력 없이 취득이 가능
- 시장가스 공급자간 경쟁을 위해서는 개별 사용량, 연락처 등 정보는 시장 경쟁의 필수 요소
- * 실제 GDF Suez는 자신이 보유한 사용자 정보를 적극 이용해 기존 사용자의 이탈방지 영업 전략을 수립, 시행
- (결정 내용) ①GDF Suez는 공공가스 고객정보(이름, 주소, 가스사용 기록 등)에 대한 경쟁사의 접근을 허용해야 하며, ②결정사항을 이행할 때까지 GDF Suez의 신규고객 모집 영업을 금지
-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긴급가처분 조치(les mesures d'urgence)*의 형식으로 발표
- * 심각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긴급한 경우 등 즉시 법위반행위를 중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경쟁당국이 내리는 조치로서 EU Regulation 1/2003에 규정된 임시조치(interim measures)와 유사
- (관찰 및 평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통신 등에 경쟁을 도입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전세계적으로 진행중
- 특히, 경쟁자 등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쟁제한행위의 경우에 경쟁당국의 조치가 적시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긴급가처분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

※ 출처: GCR, "France orders GDF to divulge client information" ('14.9.9.) 등

독일 4. 글로벌 M&A 심사시 국내 영향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

(정리 : 김이영 사무관)

1. 개 요

□ (개요) 독일 연방카르텔청(Federal Cartel Office)은 글로벌 M&A 심사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국내 영향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9.30.)

- 기업결합 신고 요건 중 하나인 “국내 시장에 충분한 영향이 있을 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여 추상적 요건을 구체화

* 우리 공정거래법에는 독일과 같은 요건은 없으나,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시 당사자 각각 국내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 신고토록 하고 있음

< 참고 : 독일 경쟁제한금지법상 기업결합 신고 의무 발생 요건 >

- 당사자 요건(독일 경쟁제한금지법 제35조 1항)
 - ①당사회사의 전세계 매출액 합계가 5억 유로 이상, ②당사기업 중 일방의 국내 매출액이 2,500만 유로 이상이며 타방의 국내 매출액이 500만 유로 이상
- 거래규모 요건(독일 경쟁제한금지법 제37조)
 -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의 양수
 - 상대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배권 취득
 - 자본 혹은 의결권의 25% 혹은 50% 취득시 각각 신고
- 국내 영향 요건(독일 경쟁제한금지법 제103조 2항)
 - 국내 시장에 충분한 영향(domestic effect)이 있을 것

2. 주요 내용

가. 국내 시장에 충분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 두 기업 간의 결합이며, 각각 경쟁제한금지법 제35조 1항 상당사자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 ㉡ 2개 기업 이상이 참여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그 합작회사의 국내 매출액이 500만 유로 이상 또는 시장점유율이 5% 이상인 경우

나.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marginal)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 합작회사가 국내 시장에서 활동하지 않고, 둘 이상의 모기업이 합작회사가 해외에서 활발히(actively) 생산하는 제품을 국내 시장에서 활발히 생산하지 않는 경우
- ㉡ 합작회사가 국내 시장에서 활동하지 않고, 합작회사가 해외에서 활발히 생산하는 제품을 둘 이상의 모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활발히 생산하지 않거나 경쟁자가 아닌 경우
- ㉢ 합작회사가 국내 시장에서 활동하지 않고, 둘 이상의 모기업이 합작회사의 해외 생산품의 관련 기술 시장에서 실질적 경쟁자가 아닌 경우

다. 사안별 검토가 필요한 경우

- ㉠ 합작회사의 국내 매출액이 500만 유로 미만이며, 시장점유율이 5% 미만인 경우

- 모기업이 **시장 지위(market position)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지재권, 노하우 등)를 합작회사에 **이전**시 국내 시장에 충분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고 의무 발생할 수 있음

[2] 합작회사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

- 국내 매출액이 없는 신규 합작회사의 경우,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 ~ 5년 내 **예상 국내 매출액**을 기준으로 국내 영향을 판단

[3] 모기업이 합작회사에 파급효과 미치는 경우

- 합작회사가 국내 시장 활동이 없거나 미미하더라도, 모기업들이 합작회사의 해외 생산 시장이나 관련 기술 시장에서 **실질적 경쟁자**며 모기업의 **합산 시장점유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파급효과로 인해 국내 시장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

3. 시사점

- 금번 가이드라인은 국내 영향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나, **국내 합작회사 결합심사**에도 참고할 필요
 - 미국·EU와 달리 現 공정거래법에는 합작회사의 기업결합만을 심사하기 위한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합작회사의 결합심사에 대한 상세한 기준을 제시한 금번 가이드라인이 향후 심사기준 마련 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가이드라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EU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제정 내용 전파 등의 대응이 필요

※ 출처 : 독일 연방카르텔청, “Guidance on domestic effects in merger control” (’14.9.30.)

독일 5. Applied materials/Tokyo Electron 기업결합 승인

(정리 : 조의제 사무관)

□ (개요) 독일 경쟁당국(Bundeskartellamt, 이하 ‘경쟁당국’)은 ’ 14 11 17. Applied Materials(美)와 Tokyo Electron(日)간의 기업결합을 승인

* AMAT는 ‘12년기준 반도체 장비시장의 1위사업자(매출 약 9.4조원)이고 TEL은 3위사업자(매출 약 5.4조원)임

□ (사건의 내용)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美)가 도쿄일렉트론(日)을 인수키로 결정(‘13. 9월)하고 독일 경쟁당국 등 전 세계 7개국에 신고

□ (경쟁당국 판단) 독일 경쟁당국은 안전지대(De minimis) 이론* 반도체 장비의 특수성,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여부 등을 감안하여 동 기업결합을 승인함

* 비록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합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가 경쟁 또는 국가간 거래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지 않는 경우(독일 내 결합당사회사의 매출액이 15백만 유로이하인 경우 등), 경쟁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 동 기업결합으로 영향을 받는 40개 관련시장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이중 50%이상 관련시장에서 안전지대에 해당

○ 양사 반도체 장비는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각각 독립적이고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호 경쟁관계에 있지 않아 중첩되는 부분이 제한적임

○ 또한, 당해 시장이 기술발전이 빠른 시장임을 감안하여 혁신이 저해 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 강력한 구매자가 존재하여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지배력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함

□ (관찰 및 평가) 전세계 경쟁당국에서 본 건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주요경쟁당국으로서는 처음으로 승인결정이 이루어진 만큼 금번 결정은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량구매자가 존재하여 독일과는 경쟁상황이 다른 만큼, 경쟁상황이 유사한 나라와 공조를 통한 면밀한 심사가 요구됨

※ 출처 : GCR, “De minimis rule sees Germany clear Tokyo Electron/Applied Materials”(’14.11.17.)

영국 6. 2015-2016 회계연도 업무계획(잠정)

(정리 : 김미영 사무관)

※ 경쟁시장청(CMA)은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Act 2013에 근거하여 외부 의견수렴을 위해 2015-16회계연도 업무계획(잠정)을 홈페이지에 공개. 의견수렴기간('14.11.26~'15.1.23) 후 접수된 의견을 분석·반영하여 '15.3월에 2015-16회계연도 최종 업무계획을 발표할 예정

- ◇ 경쟁시장청(CMA,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는 공정거래청(OFT)·경쟁위원회(CC)가 통합되어 '14.4.1일 출범
- ◇ 주요 업무 : ①기업결합 심사, ②시장조사(market investigation), ③ 경쟁법(antitrust) 집행, ④ 카르텔 형사적 절차 진행, ⑤ 소비자보호, ⑦ 타 규제당국과의 협력 등

1. 2015년도 전략 목표

미션	소비자·사업자의 이익과 경제성장을 위해 시장기능 정상화			
전략 목표	법집행 효과성 제고	경쟁영역 확장	소비자보호 강화	전문성제고 및 통합성과 창출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경쟁적 기업 결합, 거래관행(카르텔 등) 근절 ◆ 시장포폴리오의 다양성·균형성 유지 ◆ 사건처리의 효율성 제고 ◆ 사업자의 자율 준수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조사를 통해 경쟁제한적 요소 제거 ◆ 규제산업에서의 경쟁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 ◆ 소비자보호 유관 기관 지원·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업무관행 및 절차 개선 ◆ 사건처리의 신속성·공정성·투명성 확보

Ⅰ 법집행의 효과성 제고

- (기업결합) 가격인상, 품질 저하, 혁신 저해 등과 같은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기업결합의 효과적 예방 및 시정조치
 - 기업결합 신고가 의무가 아닌 자율사항인 현(現) 기업결합 신고 제도의 순기능을 유지하면서 반경쟁적 기업결합은 억제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신고(Merger Notice) 운영지침 검토 실시
 - 기업결합 심사예외(exception to the duty to refer)* 지침을 검토 하여 개정사항이 있는 경우 외부의견을 수렴할 계획
- *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업결합 행위가 시장에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도 기업결합 심사 불개시 가능
- (카르텔) 카르텔 사건에 우선순위를 두고 법집행 역량 강화
 - 디지털 포렌식 활용 등 조사정보수집(intelligence) 기능 강화를 위해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다수 인력 배치
 - 형사사법기관 등 타 법집행기관과 연계하여 큰 규모의 사건 공동 조사 실시
- * 예) Galvanised Steel Tanks(아연 도금된 강철 소재 탱크) 사건
- (사건 portfolio) 다양하면서 균형잡힌 사건포트폴리오 유지를 통해 범위반 억지력 제고 및 사건처리의 효과성 극대화 도모
- (사건처리 효율성) 정보수집, 조사 및 법집행 역량 강화를 통해 사건 처리건수 확대, 처리기한 단축 도모
- * 예) 카르텔, 시지남용의 경우 최소 4건의 신규 사건 조사개시, 소비자 보호 사건의 경우 최소 3건을 개시하고 개시 후 18개월 이내 처리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

- (자율준수) 사업자의 경쟁법에 대한 인식제고 및 자율준수 유도
 - 사업자의 잠재적 범위반 방지를 위해 다양한 soft 툴 활용
 - 기 처리된 사건 분석 및 시장 리서치를 토대로 사업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

② 경쟁영역(competition frontier)의 확장

- (시장조사) 시장조사(market investigation)을 통해 경쟁제한적 요소 제거
 - 현재 추진 중인 에너지·금융 산업 분야에 대한 시장조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 * 에너지산업: 가스·전기의 공급과 매입에 대해 중점 조사('15. 5~6월 중간 보고서, '15.12월 최종보고서 발간 예정)
 - ** 금융산업: 소매금융업(retail banking services)뿐만 아니라 개인과 중소기업의 계좌 부문에 대해서도 조사 진행('15. 9월 중간보고서, '16.5월 최종보고서 발간 예정)
 -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이슈 등에 대한 신규 시장연구(market study) 또는 시장조사(market investigation) 개시(최소 4건)
- (규제산업) 에너지, 금융, 통신 등 규제산업 부문에서 경쟁법이 보다 효과적·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
 - CP(Competition Network, CMA와 타 규제기관들로 구성)를 통해 경쟁법 집행과 관련된 전략적 이슈와 경쟁당국과 규제당국 간 법집행 중복규제 방지 등에 대해 중점 논의
 - 다른 규제당국과 체결한 MOU 개정을 통해 시의 적절하고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 다른 규제당국과의 정보공유, 상호 직원파견, 공동연수 등 실시
 - * CMA는 타 규제기관과의 경쟁촉진을 위한 공동노력의 성과를 평가한 보고서(concurrency report)를 국회에 제출·공개하여야 함

③ 소비자보호 강화

- (소비자의 선택) 소비자가 정보에 근거한 선택(informed choice)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역량 제고 및 법 집행 강화
 -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약관의 경우 영향력이 큰 사건에 우선순위를 두어 억제효과 극대화
 - 소비자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 수집 시 디지털 tool을 적극 활용하고, 수집·분석된 정보에 기초하여 소비자정책을 입안하거나 소비자보호업무 추진
- (소비자보호기관 지원·협력) 소비자보호를 위한 유관기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 CPP(Consumer Protection Partnership)*와의 협력을 통해 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특히 불공정약관법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준수 유도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 소비자 피해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기관 간 협의체로서 경쟁시장청, 무역기준 위원회, 무역 투자청, 소비자위원회, 시민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 (2012년 4월 설립)
 - CMA와 국가거래표준원(National Trading Standard Board)간 소비자보호 사건이 적절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를 구성·협의
 - ICPEN(International Consumer Protection and Enforcement Network) 의장국 역할 수행('15~'16), EC 전자상거래 전문가그룹(e-Commerce Expert Group)과 OECD 회의 참여 등 국제협력 활동 강화

④ 전문성 제고 및 통합성과 창출

- (인력·조직) 인적자원 관리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
 - 다양한 인재(변호사, 경제학자, 경영·금융 컨설턴트, 조사전문가 등)가 함께 근무하는 매트릭스(matrix) 형태의 조직 운영
 - CMA 아카데미(업무와 관련된 특정 스킬), Know-How팀(정보와 경험 공유), HR팀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전문지식과 기술 수준을 제고
 - 전직원 대상 설문조사(매년), 이직률, 사업 성과물 등을 통해 인력·조직 운영현황을 평가·환류

- (관행·절차) 업무처리과정(processes)을 최적화하고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의사결정의 시의적절성·신뢰성 확보에 역점을 주되, 유연성을 높이고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업무처리시스템과 관행 정착을 위해 전반적인 사업을 평가·관리
 - 사건처리 또는 심의절차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사업자에게 부담 주지 않도록 노력
 - 대내외 모범사례(best practices) 공유, 조직문화의 개선 등
- (사건처리) 사건처리일수, CMA의 의사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율, 투명성 지표 등을 통해 사건처리의 신속성·공정성·투명성 측정

2. 평가

- 경쟁시장청은 출범 2년째 접어들면서 법집행의 효과성 제고 등을 통해 경쟁당국으로서의 자리매김을 견고하게 하고, 타 규제당국·(민간)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임
- (사건portfolio) 다양한 산업을 다루면서도 시장·소비자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 위주로 법집행할 계획
 - 또한, 사건처리건수를 늘리면서도 처리기한을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사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
- (정보·수집기능) 카르텔 분야에서도 디지털 증거의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등 디지털 정보·수집수단 및 인력 배치 활용방안 모색
- (규제당국과의 협력) 현재 타 규제기관과 MOU 등이 작동하고 있으나, CMA 발족 후에도 주도적인 중앙 규제기관으로서 다른 규제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

호주



호주 1.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2013-14회계년도 업무 계획

(정리 : 최원석 조사관)

◇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 ACCC)는 소비자후생 증진과 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 아래 5가지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13.7.15. 홈페이지 게재)

목표 1 시장에서의 경쟁의 보호 · 촉진 및 시장실패의 치유

- (전략 1) 반경쟁적 행위에 의한 소비자후생의 침해행위 시정 및 ACCC의 법 준수 · 집행지침(ACCC's Compliance and Enforcement Policy)*에서 정하고 있는 법집행 우선순위**에 따라 경쟁 촉진 도모
 - 1) ACCC's Compliance and Enforcement Policy : 법 준수 달성 및 ACCC의 집행권한, 기능, 우선순위, 전략 등을 정하기 위한 원칙(principles)들을 제시
 - 2)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행위에 대해 우선적으로 법 집행
 - : (i) 공공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ii) 소비자 및 중소기업에 상당한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 (iii) 국영기업 또는 대기업의 부당한 행위 (iv) 국가적 또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포함한 행위, (v) 사회적 약자 그룹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 (vi)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집중화된 시장에서의 행위, (vii) 신흥시장에서의 주요이슈를 포함한 행위, (viii) ACCC가 관여하지 않는 경우 산업 전체 또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행위 (ix) 범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등
- (전략 2) 집중화되고 새롭게 출현한 시장 및 국가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을 크게 해치는 구조적 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 실시
- (전략 3) 기업결합 신고 · 심사 시 완벽하고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기업결합 당사회사, 기업결합 신고주체, 시장참여자들에게 분명한 가이드라인 제시
- (전략 4) 산업별 특성에 맞는 규제의 적용 및 시장 성과물(outcomes)의 모니터링 실시

목표 2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 소비자와 중소기업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

- ☐ (전략 1) 소비자권의 향상 및 공정하고 경쟁적인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ACCC의 법 준수·집행지침(ACCC's Compliance and Enforcement Policy)에서 정하고 있는 법집행 우선순위에 따라 성과 도출 도모
- ☐ (전략 2) 법 집행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법(ACL: Australian Consumer Law) 집행기관 및 여타 법 집행기관과의 보다 강화되고 체계적인 협력관계 구축 및 활성화
- ☐ (전략 3) 소비자제품의 안전사고로 인한 상해나 사망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통합된 관리시스템 발굴 및 구현
- ☐ (전략 4) 중소기업의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의 활동을 방해하는 반경쟁적이거나 부당한 거래 방지 및 공공이익을 창출하는 중소기업체들의 사업자단체행위 지원·촉진
- ☐ (전략 5) 소비자 스스로 소비자법(ACL)에서 부여하고 있는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역량을 강화

목표 3	독점적 기간산업(monopoly infrastructure)의 효율적 운영·활용 및 투자 촉진
-------------	---

- ☐ (전략 1) 경쟁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네트워크 규제(network regulation)* 도출
* 망 산업에서의 규제를 의미
- ☐ (전략 2) 시장 원칙(rule)의 적용과 시장 성과물을 모니터링하여 시장(신흥시장 포함)의 가동성(workability)의 향상 도모
- ☐ (전략 3) 고도로 집중화되어 새롭게 규제가 완화되거나 새롭게 출현된 시장에서의 산업별 모니터링 리포트 마련

- ☐ (전략 4) 국내·외 법집행기관(규제기관)과의 협력채널 구축을 통해 법집행 방식과 절차의 개선 도모

목표 4 다양한 이해관계 단체와의 협력 강화

- ☐ (전략 1) 다양한 우호집단 형성 및 그들과의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포괄적인 전략 수립·구현
- ☐ (전략 2) 소비자후생 증진을 위한 ACCC의 활동을 지지하는 여러 이해관계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전개

목표 5 조직의 효율성 제고

- ☐ (전략 1) 숙련된 인력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 및 지식공유 활성화
- ☐ (전략 2) 안전하고, 건전하고, 동료 간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 조성
- ☐ (전략 3) 조직구성원의 경험과 스킬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관리시스템(management of projects)을 재정비
- ☐ (전략 4) 조직운영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전문적인 법률 및 경제학 관련 서비스의 개선
- ☐ (전략 5) 조직운영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업지원 서비스 및 시스템의 개선

호주 2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2014-15 회계년도 업무 계획

(정리 : 조의제 사무관)

◇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소비자후생 증진과 원활한 시장 기능을 위해 2014-2015 업무방향으로 아래 4가지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

1. 2014-2015 업무계획

목표 1 시장에서의 경쟁의 보호 · 촉진 및 시장실패의 치유

□ (전략 1) 반경쟁적 행위에 의한 소비자후생의 침해행위 시정 및 ACCC의 법 준수 · 집행지침(ACCC's Compliance and Enforcement Policy)*에서 정하고 있는 법집행 우선순위**에 따라 경쟁 촉진 도모

- 1) ACCC's Compliance and Enforcement Policy : 법 준수 달성 및 ACCC의 집행권한, 기능, 우선순위, 전략 등을 정하기 위한 원칙(principles)들을 제시
- 2)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행위에 대해 우선적으로 법 집행

- ① 공공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소비자 및 중소기업에 상당한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
- ③ 국영기업 또는 대기업의 부당한 행위
- ④ 국가적 또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포함한 행위,
- ⑤ 사회적 약자 그룹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
- ⑥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집중화된 시장에서의 행위,
- ⑦ 신흥시장에서의 주요이슈를 포함한 행위,
- ⑧ ACCC가 관여하지 않는 경우 산업 전체 또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행위
- ⑨ 법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등

□ (전략 2) 집중화되고 새롭게 출현한 시장 및 국가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을 크게 해치는 구조적 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 실시

- ☐ (전략 3) 기업결합 신고·심사 시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기업결합 당사회사, 기업결합 신고주체, 시장참여자들에게 분명한 가이드라인 제시
- ☐ (전략 4) 산업별 특성에 맞는 규제 적용 및 시장 성과물(outcomes)의 모니터링 실시

목표 2**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 소비자와 중소기업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 (전략 1) 소비자권의 향상 및 공정하고 경쟁적인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ACCC의 법 준수·집행지침(ACCC's Compliance and Enforcement Policy)에서 정하고 있는 법집행 우선순위에 따라 성과 도출 도모
- ☐ (전략 2) 법 집행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법(ACL: Australian Consumer Law) 집행기관 및 여타 법 집행기관과의 보다 강화되고 체계적인 협력관계 구축 및 활성화
- ☐ (전략 3) 소비자제품의 안전사고로 인한 상해나 사망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통합된 안전관리시스템 발굴 및 구현
- ☐ (전략 4) 중소기업의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의 활동을 방해하는 반경쟁적이거나 부당한 거래 방지 및 공공이익을 창출하는 중소기업체들의 사업자단체행위 지원·촉진
- ☐ (전략 5) 소비자 스스로 소비자법(ACL)에서 부여하고 있는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역량을 강화

목표 3**장기적인 소비자 이익의 관점에서 독점적 기간산업(monopoly infrastructure)의 효율적 운영·활용 및 투자 촉진**

- ☐ (전략 1) 경쟁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네트워크 규제(network regulation)* 도출

* 망 산업에서의 규제를 의미

- ☐ (전략 2) 시장 원칙(rule)의 적용과 시장 성과물을 모니터링하여 시장(신흥시장 포함)의 가동성(workability)의 향상 도모
- ☐ (전략 3) 고도로 집중화되어 새롭게 규제가 완화되거나 새롭게 출현된 시장에서의 산업별 모니터링 리포트 마련
- ☐ (전략 4) 법집행 방식과 절차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외 법집행기관(규제기관)과의 협력채널 구축을 통해

목표 4 조직의 효율성 제고

- ☐ (전략 1) 숙련된 인력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 및 지식공유 활성화
- ☐ (전략 2) 동료 간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근무환경 조성
- ☐ (전략 3) 조직구성원의 경험과 스킬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관리시스템(management of projects)을 재정비
- ☐ (전략 4) 조직운영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전문적인 법률 및 경제학 관련 서비스의 개선
- ☐ (전략 5) 조직운영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업지원 서비스 및 시스템의 개선
- ☐ (전략 6) 다양한 우호집단 형성 및 그들과의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포괄적인 전략 수립·구현
- ☐ (전략 7) 규제성과는 유지·향상시키면서, 규제는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여 기업체의 경쟁법 준수 부담을 경감

2. 평가

- ACCC는 한국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유사한 부분이 많음
 - (중소기업보호) ACCC는 '14 - '15년도 중점 업무 중의 하나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들 시장에서 반경쟁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을 시사
 - (부처간 협업) 법집행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 법집행기관 및 규제기관과의 협력채널 구축
 - (맞춤형 규제) 규제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형식적인 규제에서 탈피하여 산업별 특성에 맞는 규제를 적용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중 국



중국

1. 상무부, P3 해상운송 네트워크 기업결합 불허

(정리 : 김미영 사무관)

- (개요) 중국 상무부(MOFCOM)는 P3 네트워크*가 해운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기업결합 불허 결정을 내림('14.6.17.)

* 'P3 네트워크'는 세계 3대 해운사인 머스크라인(덴마크), MSC(스위스), CMA CGM(프랑스)이 아시아-유럽, 대서양, 태평양 항로에서 공동으로 노선을 운행하기 위해 설립 예정이었던 합작 법인임

- (결정내용) P3 네트워크는 전통적으로 선박과 선복*(vessel-sharing and slot-exchanging)만을 공유한 느슨한 형태의 해운동맹(shipping alliances)과는 달리, 선박·선복뿐만 아니라 연료, 항만까지 공유하는 합작회사를 설립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할 것으로 판단

* 여객을 탑승시키거나 화물을 싣도록 구획된 장소

- 아시아-유럽 간 노선 중 3사의 수송능력이 전체의 47%에 달하여 시장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항만과 경쟁 해운사들의 협상력(bargaining power)을 더욱 저하시킬 것으로 판단

- 또한, 자진시정방안*이 경쟁제한성을 제거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

* 최종 자진시정방안은 2014. 6 .9. 제출됨

- (평가 및 시사점) 초국경적 M&A사건에 대한 중국 상무부의 독립적인 법 집행* 의지와 커져가는 영향력을 잘 보여준 사례

* 美 연방해사위원회, EU 집행위원회에서는 본 건을 조건 없이 승인

- 세계 물동량의 60%를 차지하는 중국에서 불승인 결정이 나오에 따라 해운 3사는 P3 네트워크 설립 추진을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

* P3 네트워크는 KFTC에 제출한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함('14.7.4.)

- 다만, P3가 다른 형태로 다시 시장진입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추후 상황을 당분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

중국 2. 발개위, 수입자동차업체 조사 동향

(정리 : 김미영 사무관)

1. 개요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지난 2011년 말부터 지방 정부 기관과 공동으로 수입자동차업체(특히, 고가 브랜드 중점)를 대상으로 반독점 조사 실시

* 중국 CCTV 등 주요 언론매체에서는 일부 유럽 고가 자동차의 경우 중국 내 판매가격이 미국보다 3배 이상 비싸며, 차량부품 가격의 경우 국제 시장의 일반 가격수준보다 최고 12배 이상까지 높은 것으로 보도

- (조사배경) 중국 NDRC는 수입자동차 및 그 정비가격이 외국보다 높게 형성되는 주된 원인을 유통과정에서의 각종 불합리한 조건 강요* 또는 재판매가격유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관련조사 진행

* 예) 지역 및 고객제한, 끼워팔기, 차량판매 후 자사부품의 배타적 공급 및 고가책정, 상벌시스템 운영 등

- (진행상황) 중국 NDRC의 지도(즉, 권한위임)하에 호북성, 상해시, 강소성 등 지방정부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법 위반 내용이 입증되는 건별로 순차적으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음

2. 지방정부의 조치내용

가. YIQI-DAZHONG판매유한책임회사(이하 '폭스바겐')*

* 중국의 一汽(Yi-Qi), 독일의 폭스바겐(Volkswagen) 및 아우디(Audi) 합작회사

- (위반내용) 폭스바겐 소속 Audi판매사업부는 '12년부터 수차례 10개 Audi중개상과 완성차 판매 및 정비서비스가격을 협의하고,

영업관리규정 하달 등을 통해 Audi 표준가격의 엄격한 준수를 감독·독촉함(중국 반독점법 제14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정위반)

- 10개 Audi중개상들은 중개상 가격동맹표, 회의록에 서명하는 등의 형식을 통해 완성차 판매가격을 합의·실행함(중국 반독점법 제13조 '수평카르텔' 규정위반)

□ (조치결과) 호북성 물가국은 폭스바겐 및 10개 Audi중개상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가격담합을 이유로 총 2.4억 위안(약 47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나. 크라이슬러 (중국)자동차판매유한회사(이하 '크라이슬러')

□ (위반내용) '12년부터 '14년까지 자동차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개상과 재판매가격유지 조항을 포함한 위탁판매협약을 체결하고, 재판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중개상에 대해 불이익 제공(중국 반독점법 제14조 위반)

- 상해지역의 3개 중개상은 정비작업시간, 부품가격, 도색가격 등에 대해 통일적인 약정을 하고, 이를 실행함(중국 반독점법 제13조 위반)

□ (조치결과) 상해시 물가국은 크라이슬러 및 3개 중개상의 재판매 가격유지행위, 가격담합을 이유로 총 3,382만 위안(약 60억원)의 과징금 부과

다. 벤츠

□ 강소성 반독점분국은 지난 '14.8월 상해, 소주 등 6개 도시의 벤츠 판매점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관련 증거자료를 조사 중

3. 평가 및 시사점

- 미국, 유럽 등 주요 자동차수출국들은 이번 조사가 수입업체들에게 가격인하 위협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시
 - 다만, 수입자동차에 대한 여론 악화와 중국 정부의 자동차시장 유통질서 정비의도가 복합되어 '11년부터 추진되어 온 조치로서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만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 (시사점) 그동안의 조사가 고가 수입자동차 브랜드에 집중되고 있으나, 대중 자동차 브랜드(현대자동차 등)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조사동향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할 필요
 - 중국 경쟁당국의 법집행 강화에 대응하여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위반 예방 활동 강화 필요

※ 출처: 주중대사관 파견관 전문 ('14.9.18.)

GCR, "China fines Audi and Chrysler" ('14.9.12.) 등

중국

3. 전인대 상무위원회, 광고법 개정 동향

(정리 : 김이영 사무관)

1. 개 요

□ 제12회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광고법 제정** 20년 만에 개정 초안을 심의(2014.8.25.)

* 전국인민대표회의 : 중국 최고 국가기관으로 국가의사결정 및 집행을 담당. 헌법 개정, 법률 제정, 국가 주석·부주석·국무원 총리 선출이 주요 업무

** 1995년 2월 1일 광고법이 발효

2. 주요 내용

가. 광고 준칙을 개선 · 보충

㉠ 약품 · 의료기계 광고 규정을 구체화

- 약품 · 의료기계 광고는 사실에 기반 해야 하며, 당국의 승인을 받은 약품 · 의료기계 · 의료 광고 외 기타 광고에서 질병 치료 기능의 언급을 금지(개정안 26조)

㉡ 담배 광고 제한

- 언론 매체*를 통한 담배 광고 및 공공장소**에서의 담배 광고를 엄격하게 제한(개정안 20조)

* 라디오, 영화, TV, 잡지, 신문, 전자 저작물, 인터넷 등을 통한 직·간접적 광고 금지

** 도서관, 문화센터, 박물관, 영화관, 병원·학교 주변 등 공공장소 및 옥외 광고 금지

나. 광고 주체의 책임 강화

㉠ 광고주는 광고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 부담(개정안 33조)

② 광고 홍보인(endorser)*에 대한 책임 강화(개정안 39조)

* 광고 홍보인은 광고에서 상품·서비스를 홍보·추천·증명하는 사람을 지칭

- 광고 홍보인은 광고 중 상품·서비스 추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본인이 미사용한 상품·서비스에 대해 자신이 사용한 것처럼 그 효능을 홍보할 수 없음**

③ 미성년자 보호(개정안 40조)

- 초/중학교, 유치원내 광고 게시 및 교과서/교육보조 자료, 교복, 스쿨버스 등에 광고 게시 금지
- 모든 매체에서 미성년자를 타겟으로 한 제약, 의료, 의료 기계, 온라인 게임, 주류 광고 금지

④ 통신사 및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사에 대한 광고 관리 책임 부과

- 통신사(telecom operator) 및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사(network service provider)는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 허위 광고를 발표하는 것을 알고 있거나 응당 알고 있어야 하는 경우 이를 제지해야함(개정안 44조)

라. 허위 광고(deceptive advertising) 유형 구체화(개정안 27조)

- 소비자를 기만 또는 오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 광고를 허위 광고로 정의하고, 그 유형을 구체화

< 허위 광고 유형 >

- 판매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능·품질 등의 정보가 실제 상황과 부합치 않아 구매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
- 허위·위조 또는 검증할 수 없는 과학적 연구 성과·통계자료·조사결과 등의 정보를 증명자료로 사용할 경우
- 사용한 상품의 효능 또는 받은 서비스의 효과가 허위인 경우

마. 법적 책임 제고

㉑ 허위 광고 등 중점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상향 조정

- 허위 광고시 광고 중지 명령 발부, 광고 비용 몰수, 광고 비용의 3배 ~ 5배 이하의 벌금 병과 및 비용을 추산할 수 없는 경우 20만 ~ 100만 위안 상당의 벌금 부과 가능(개정안 54조)
- 2년 내에 3차례 이상 엄중한 위법 행위 있는 경우 가중 처벌

㉒ 광고 홍보인(endorser)에 대한 법률책임을 제고하여, 그가 허위 광고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거나 응당 알 수 있으면서도 광고 중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시 처벌(개정안 58조)

- 허위 광고로 얻은 소득을 몰수하고 동 소득의 2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3. 시사점

- 이번 개정안이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광고업계나 한류스타 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므로 향후 입법 동향을 주시할 필요

※ 출처: 주중대사관 파견관 전문 ('14.9.30.)

www.china.org.cn, "China tightens rules on celebrity advertising" 등 ('14.8.27.)

중국 4. 발개위, 절강성 보험업계 가격담합행위에 과징금 부과

(정리 : 김미영 사무관)

□ (개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절강성(浙江省) 소재 23개 보험회사들과 보험업협회에게 가격담합을 이유로 1.1억 위안(약 18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 (위반내용) 절강성 보험업협회는 '09년부터 성(省) 내 보험회사들과 수차례 회의를 조직, 개최하여 상업차량보험할인율과 상업차량 보험대리수수료를 합의

- 합의내용을 이행치 않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금전적 불이익 제공

○ (조치내용) 이번 가격담합을 주도한 절강성 보험업협회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한도인 50만 위안(약 83백만 원)을 부과한 반면,

- 부차적 책임이 있는 23개 보험회사들에 대해서는 법정 최저한도인 전년도('12)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각각 부과

- 아울러, 중요증거를 제공하는 등 조사에 협조한 3개 자진신고 회사는 그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하고, 9개 회사는 무혐의 처리

* 이 사건에 대한 조치결정은 '13.12. 이루어졌지만, '14. 9. 2에 그 내용을 공식발표

□ (시사점) 이번 조치결정 그 자체보다 중국 경쟁당국이 유례없이 법 적용방법, 사업자별 범위반내용, 과징금 산정방법 등을 자세하게 공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

○ 중국 경쟁당국 스스로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며, 그간 외부에서 제기되었던 의문과 비판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출처 : GCR, "NDRC sheds light on its process in insurance cartel case"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전문('14.9.18)

중국 5 소송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제소 허용

(정리 : 김미영 사무관)

□ (개요) 중국은 공공기관¹⁾이 행정권한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이하 ‘공공기관의 경쟁제한적 행위’라 함)²⁾ 이에 대한 소송 제기가 가능하도록 행정소송법을 개정(‘15. 5. 발효 예정)

- 1) 행정기관과 법률·법규에 의해 공공사무관리의 권한을 위임받은 조직
- 2) 예를 들자면, 지방정부가 (i) 상품 또는 용역의 지역 간 자유로운 유통을 제한하거나, (ii) 타 지역의 사업자를 차별취급을 하거나, (iii) 특정 사업자로 하여금 특정 제품을 지정된 가격에 팔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음

□ (개정배경) 중국 반독점법 제50조에서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소를 허용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경쟁제한적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사실상 법 집행에 있어서도 매우 소극적인 경향

- 또한, 반독점법 제51조에서는 공공기관이 경쟁제한적 행위를 한 경우 그 상급기관이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하고, 반독점법 집행기구はその 상급기관에 법에 의한 처벌을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실제 상급기관에서 조사하여 시정토록 명령하거나 반독점법 집행기구에서 처벌을 건의한 사례는 극히 드문 실정

* <참고> 중국에는 22개의 성(省)이 있는데, 지방보호주의에 근거하여 타 지역 기업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등 지방정부의 행정권한 남용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반독점법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쟁제한적 행위를 규제

□ (시사점) 이번 소송법 개정뿐만 아니라 한·중 FTA(‘14. 11.10.)에서도 공기업에 대한 경쟁법 적용 의무규정을 두고 있어 공공기관의 경쟁 제한적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

※ 출처 : GCR, "China allows abuse cases against government"(‘14.11.5)

의견



일본

1. 공취위, 국제 해상운송 카르텔 제재

(정리 : 최원석 조사관)

1. 개 요

- 일본 공취위는 자동차 국제 해상운송*과 관련 NYK라인·K라인(日)을 포함한 5개 해운사의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cease and desist order)과 함께 **총 227억엔**(약 2,2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14.3.18.)

* **국제 해상운송서비스** : PCC(승용차 전용선) 및 PCTC(승용차 및 트럭운송선)와 같이 차량의 적재와 하역이 가능한 **로로선**(화물을 실은 차량을 그대로 싣고 내리는 트레일러선)을 이용하여 자동차·트럭을 운송하는 서비스

2. 주요 내용

- ‘08. 1월~’12. 9월 기간 중 담합업체*들은 기존 거래를 유지하고 자동차 국제해상운송서비스의 운임율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① 운임율 인하를 통한 고객 유치 경쟁 및 상호 입찰 경쟁을 자제하고, ② 운임율을 상호 합의하에 결정하였음

* **NYK라인**(Nippon Yusen Kabushiki Kaisha, 日), **K라인**(Kawasaki Kisen Kaisha, 日), **WWL**(Wallerius Wilhelmsen Logistics, 노르웨이), **NMCC** (Nissan Motor Car Carrier, 日), **MOL**(Mitsui O.S.K. Lines, 日) 총 5개 업체

3. 조치 사항

- 5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NYK라인 131억 엔, K라인 약 57억 엔, WWL 약 35억 엔, NMCC 4억 엔, MOL(위반이 있으나 중지명령·과징금 면제) **총 227억 엔**(약 2,262억원) **과징금을 부과**

4. 평 가

- 동 조치는 일본 공취위가 가격카르텔에 부과한 **과징금 중 2번째로 큰 액수**로, 가격카르텔에 대한 일본 공취위의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

* 유럽·미국 지역에서도 동일 해운사에 대한 경쟁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임

일본/
싱가폴

2. 일본의 베어링(bearing) 제조업체 담합 제재

(정리 : 김미영 사무관)

◇ 일본 공취위(JFTC)와 싱가포르 경쟁위(CCS)는 일본 베어링제조업체*들과 그 자회사들의 정보교환과 가격담합에 대해 제재 조치

* JTEK, Nachi-Fujikoshi Corp, NSK, NTN

□ (일본) 일본 4개 베어링 제조업체들(JTEK, Nachi-Fujikoshi Corp, NSK, NTN)은 그 판매자회사와 자동차 제조업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산업기계용과 자동차용 베어링의 가격인상*을 합의('10.7월 ~ '11.7월)

- 3개 업체(Nachi-Fujikoshi Corp, NSK, NTN)에게 총 ¥134억(약 1,27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13. 3), 자신신고한 1개 업체(JTEK)는 그 처벌을 면제
- 이외에도 판매직원들을 대상으로 법 준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시정명령 부과

* 산업기계용 : 8%(일반 베어링)과 10%(대형 베어링) 인상
자동차용: 강철의 무게 1kg당 20엔 인상

□ (싱가폴) 일본의 4개 베어링 제조업체들(JTEK, Nachi-Fujikoshi Corp, NSK, NTN) 및 그 싱가포르 자회사들은 상당기간 동안 수차례의 모임을 통해 민감한 경영정보 교환과 베어링 가격인상을 합의('06.1월 ~ '11.7월)

- 3개 업체(Nachi-Fujikoshi Corp, NSK, NTN)에게 총 S\$9.3백만(약 7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14. 5)하고*, 자신신고한 1개 업체(JTEK)는 면제

* 과징금 산정 시 (i) 가격고정은 중대한 위반행위인 점, (ii) 담합 대상상품인 베어링의 경우 균질화된(homogenised) 제품인 점, (iii) 위반업체들의 싱가포르 시장 내 차지하는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

- (시사점) 최근 국제카르텔행위에 대해 여러 해외 경쟁당국에서 연달아 제재 조치하는 추세^{*}를 볼 때,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의 보다 엄격한 경쟁법 준수가 요구되어질 것으로 전망
 - 한편, 싱가포르 경쟁당국의 경우 이번에 최초로 자국 경쟁법의 역외 적용을 통해 국제카르텔행위에 대해 제재조치하였으며, 향후에도 법집행 강화 의지를 표명(현재 화물운송업 관련 국제카르텔 조사 중)
- * 예) 일본 베어링 제조업체들의 담합사건의 경우 미국, EU, 캐나다, 중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제재 조치

※ 출처 : GCR, "CCS fines first global cartel"('14.5.28)
Law360, "Japan Fines Bearing Cos. \$142M for Price-Fixing"

기 타



BRICS 1. 제3회 BRICS 국제경쟁 컨퍼런스 논의결과

(정리 : 양의석 사무관)

1. 개 요

□ 2009년부터 격년으로 개최 중인 제 3회 BRICS 국제경쟁 컨퍼런스가 2013. 11.20-21 기간 중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됨

※ 미국·캐나다·호주 등 주요선진 경쟁당국 수장과 EU 집행위 부의장, OECD 의장 등 국제기구 수장, 저명한 학자들이 참석

○ 세계적 관심주제를 파악가능하고 쟁점별로 중국 등 신흥경쟁당국과 선진경쟁당국과의 시각차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

- 경쟁중립성*과 경쟁정책과 산업정책의 관계 등에서 상호간의 시각차가 노출됨

* 민간기업과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공기업이 받는 특혜 즉, 정부보조 등 각종 혜택을 제거하여 경쟁 왜곡을 방지하고 시장효율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중국 국영기업의 성장 등을 경계한 미국 등에 의해 최근 활발히 제기 중

2. 주요 내용

□ (경쟁중립성) SOEs(State-owned enterprises)가 경제성장의 견인차인 신흥국*들과 자국의 민간기업을 위해 그들을 경쟁법 적용 대상으로 포섭하려는 선진국의 의견이 대립됨

* BRICs 국가 중에서는 중국 GDP의 96%가 SOEs로부터 창출되며 러시아는 81%, 인도는 59%, 브라질은 50%

○ Eleanor Fox 뉴욕대 교수 등은 전세계 대기업을 10퍼센트를 차지하는 SOEs에 대한 정부지원 등이 전면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은 더 큰 공익을 해할 수 있다고 지적

○ 한편 중국 등은 국가개입은 연구개발과 혁신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하며 광학디스크에 대한 정부보조 연구가 인터넷 발전을 촉진하고 비용을 감소시킨 점을 예로 거론

□ (경쟁정책과 산업정책) 경쟁법 집행 시 사회적 고려를 반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미국과 남아공의 의견이 대립

○ Ramirez 미국 FTC위원장은 경쟁정책은 효율성과 소비자후생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사회·정치적 이슈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

- 미국 대공황시 경쟁법의 완화된 집행이 오히려 악영향을 끼쳤음을 지적하며 경제적 위기일수록 경쟁적 시장보다 나은 대안이 없다고 주장

- 남아공의 Walmart와 Massmart간 기업결합 사건을 지적하며 이와 같이 비경쟁적 논점을 끌어드리는 것은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경쟁법 집행기준을 무너뜨린다고 비판함

* 2012년 남아공에서 Walmart의 Massmart 인수건과 관련해서 남아공 법원은 503명의 해고노동자의 복직을 조건으로 인수합병 허가

○ Bonakele 남아공 위원장은 35%이상의 실업률에 시달리는 국가에서 경쟁당국이 일자리창출과 산업성장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주장

- 경쟁당국이 책임없는 독립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면서 경쟁정책은 고립된 부처가 아니며 경쟁법은 정부의 정치적·경제적 정책과 균형을 이뤄야한다고 역설

□ (경쟁법 집행: 선택과 집중) 선진경쟁당국장들은 신흥경쟁당국의 인력과 예산 제약을 감안시 소수의 사건을 선택과 집중 전략을 사용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 John Fingleton 전 영국 OFT 사무처장은 독립성(independence)과 무관심(disinterest)을 혼동해서는 안되며 경쟁당국의 수장들에게도 정치적인 관여는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

○ Frederic Jenny OECD경쟁위 의장은 이에 동의하며 경제에 영향이 큰 몇몇 사건을 골라서 주의깊게 처리하는 것을 제안

브라질 2. CADE, 지하철 공사 입찰담합 조사결과 발표

(정리 : 김이영 사무관)

- (개요) CADE는 상파울로 지역 등의 지하철·철도 인프라 건설 공사 및 시설유지 관련 입찰담합 조사결과 발표를 발표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행정절차(formal administrative proceedings)*를 개시(3. 20)

* 공식적인 행정절차 개시 후 피심인은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해당 사건이 CADE tribunal에 상정되어 범위반여부 등에 대한 심판절차가 시작

- (주요내용) 1998~2013년까지 18개 철도회사 및 100명의 임직원이 상파울로, 브라질리아 지역 등에서의 지하철· 철도 인프라 건설 공사 및 시설유지 관련 15개 입찰담합에 가담한 혐의

- 독일계 기업 Siemens의 리니언시 신청으로 조사가 시작되었고('13. 5.), Alstom, Mitsui 등 13개 철도회사에 대해 현장조사 실시('13. 7.)

*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철도회사들이 정부관료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찰조사도 병행되고 있는 상황

- 피심인들에게 2012년 매출액(revenue)의 최대 20%에 상응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

- (평가) CADE는 "카르텔은 경쟁을 해치는 가장 심각한 행위로서 카르텔 적발·제재는 CADE의 최우선 임무"라고 언급하면서 엄격한 법집행 의지를 표명*

- 특히, 브라질은 2014.6월 월드컵과 2016.8월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 교통 인프라, 경기장 건설 등 공공입찰 담합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법집행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 CADE는 2013년 10개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

○ 한편, 이번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Siemens의 리니언시 신청사실과 증거자료의 내용이 언론에 유출되면서 리니언시제도의 비밀보장에 대해 큰 논란이 야기*

- 리니언시 내용이 외부에 유출된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는 리니언시제도의 신뢰성에 대해 큰 부정적 영향을 초래
- 리니언시 신청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호 등 리니언시제도의 개선방안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될 것으로 보임

* Siemens는 자사가 제출한 리니언시 증거자료에서 상파울로 주정부가 사실상 이번 입찰담합을 승인(approve)하였다고 주장. 이에 따라 상파울로 주정부는 리니언시 관련 자료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파울로 지방법원은 브라질리아 등 다른 지방법원의 판결과 달리 CADE로 하여금 리니언시에 관한 정보와 현장조사 실시계획을 상파울로 주정부에게 공개하라고 판결

※ 출처 : GCR, “CADE announces subway case findings” (’14.3.21.) 등

기 타 3. 아마존의 독점력 관련 뉴욕타임즈 기고문 요약

(정리 : 홍수진 사무관)

□ (요지) 폴 크루그먼*은 세계 최대 온라인서점인 아마존을 수요 독점자(monopsonist)**로 규정하고 규제가 필요함을 주장('14.10.19)

* 미국 프린스턴 대학 경제학 교수이자 칼럼니스트로, 2008년 노벨경제학 수상

** 공급자는 다수이나 구매자가 극소수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독점사업자

□ (규제필요성) 아마존의 독점력 남용행위가 미국에 해악이 되고 있으며 이는 영업전략이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대상이라고 주장

- 아마존을 1900년대 스탠다드오일社(Standard Oil)와 비교하면서 과거와 같이 일부 기업의 과도한 시장지배력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아마존을 온라인서점 업계의 “노상강도”에 비유하는 등 강도 높게 비난

□ (최근 분쟁사례) 최근 아마존은 자신의 독점력을 남용하여 유럽계 대형출판사인 아셰트(Hachette Bookgroup)와의 분쟁을 겪음('14.4.)

- 아셰트가 아마존의 전자책 가격 할인 요구를 거부하자, 아마존은 아셰트 출판물의 ①배송지연, ②가격인상, ③다른 출판물로의 고객 유인 등 아셰트에 불리한 조치를 부과
- 입소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출판업계에서 아마존은 불리한 조치를 통해 이를 차단할 수 있어 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

□ (영향) 수요독점자로 기능하여 시장가격은 낮아질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작가와 독자의 후생을 저해

- 통상의 공급독점자와 같이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력을 이용하여 출판사를 압박해 소비자 가격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음
- 그러나, 출판사에 대한 가격인하 압박을 통해 궁극적으로 작가와 독자에게까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 (시사점) 플랫폼 사업자의 양면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에 대한 규제 근거로 수요독점(monopsony)을 제시한 것으로 추후 정책방향에 참고 가능

※ The New York Times, “Amazon’s Monopsony Is Not O.K.”('14.10.19.)

제8회 서울국제경쟁포럼



1세션 특허관리전문회사의 지재권 남용에 대한 경쟁법 집행 방향

(정리 : 김이영 사무관)

- ◇ (사회자) Frederic Jenny [OECD 경쟁위원장]
- ◇ (발제자) Paul Nihoul [벨기에 루뱅대 교수]
Maureen Ohlhausen [미국 FTC 위원]
- ◇ (토론자) Scott Kieff [미국 ITC 위원]
신 영 선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Allen Lo [미국 구글 법률고문]
강 기 중 [한국 삼성전자 부사장]

1. 제 1 발표 (발 표 자 : Paul Nihoul, 벨기에 루뱅대 교수)

□ 유럽연합(EU)의 상황을 기초로 최근 NPE에 대한 EU의 법집행 방향과 NPE 규제시 검토 사항 등을 발표

- EU의 경우 NPE에 대한 규제체계가 명확히 있지는 않으나 MS의 노키아 인수와 관련, EU경쟁위원장이 노키아가 특허괴물로 바뀔 우려를 언급하는 등 특허괴물의 규제 필요성에 공감
- 다만, 현재까지는 EU전체를 아우르는 통일된 직접 규제 법규가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회원국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NPE는 상품 제조 대신 특허권만 주장하는 회사로서 NPE 모두가 문제가 아니라 권리를 남용*하는 일부 특허괴물이 문제

* 제조업체에 특허 사용료를 과다하게 부과하거나 특허 사용을 가로막는 방식(Hold-up) 등이 대표 사례

- 제조과정 전체를 특허출원하여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도 많아 막대한 소송비용이 소요되며 직접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제조기업의 맞소송 위험도 없음

※ EU의 제조기업들은 NPE의 지재권 남용에 대해 정부의 적극 개입을 희망

2. 제 2 발표 (발 표 자 : Maureen Ohlhausen, 미국 FTC 위원)

- NPE가 기술혁신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까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므로 現 시점에서는 ‘특허괴물법안(Troll Act)*’과 같이 명백한 악의적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

※ 발표 내용이 FTC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며 사건임을 전제로 밝힘

* Troll Act(Targeting Rogue and Opaque Letters Act) : 유효하지 않은 특허권을 행사하는 등 악의적인(in bad faith) 특허권 행사에 대해 FTC가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 NPE는 특허침해소송을 통해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혁신을 방해하고,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켜 소비자 권리를 저해함
 - 다만 NPE가 특허 구매를 통해 특허권을 주장하므로 발명가, 중소기업 등의 혁신 아이디어를 상업화하고 파산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등 긍정적 측면도 존재
- ⇒ 따라서, NPE가 야기하는 문제가 경쟁법이나 소비자보호 이슈인지, 특허시스템 또는 소송 이슈로 봐야 하는지 더 많은 고민이 필요
- 미국 연방정부(백악관, FTC 등), 연방의회, 법원 등 여러 기구에서 NPE 문제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가 진행 중
 - (백악관) 혁신리포트에서 NPE 활동이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특허 소유권의 투명성 강화, 양질의 특허를 보장하기 위한 특허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발표('13.6.)
 - (FTC, DOJ) FTC 지재권 리포트 발표('11), DOJ/FTC PAE 공동워크숍('12), FTC의 NPE 실태조사 실시('14.1 ~) 등
- * NPE가 특허 홀드업에 연루될 가능성, 기술적 진보 없이 거래 비용을 높일 가능성, 표준설정과정(Standard-Setting Process)을 조작할 우려 등이 제기됨
- (연방 의회) 특허권 남용을 제한하는 여러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현재까지 통과된 법안은 없으며 논의가 지속

* Innovation Act, Patent Transparency and Improvements Act, Targeting Rogue and Opaque Letters Act or "TROLL" Act 등

- (연방 법원) NPE의 특허권 남용과 관련한 3개 사건* 계류 중

* Octane Fitness v. ICON Health and Fitness사건, Highmark v. Allcare Health Management Systems 사건, Alice Corp. v. CLS Bank Int'l. 사건

3. 제 3 발표 (발 표 자 : Scott Kieff, 미국 ITC 위원)

□ NPE의 지재권 남용은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은 사안이나 전세계 전문가의 논의의 장이 열린 것 자체가 매우 유익

※ 발표 내용이 ITC를 대표하지는 않으며 사건임을 전제로 밝힘

- ITC는 미국 내 수입제품이 미국 지재권을 침해하거나 반덤핑 등 미국 산업에 불공정한 영향을 끼치는지 등을 조사
- 특허 시스템의 장점으로 발명을 촉진하는 효과를 강조하나 그에 못지않게 시장참여자들이 특허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거래가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
 - 실증 데이터에 따르면 특허 홀드업(Hold-up)이 빈번한 산업의 경우 제품 가격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음
- 특허괴물의 홀드업(Hold-up)에 대처하기 위해 제조 기업은 생산에 필수적인 특허를 명확히 인식하고 특허권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
- ITC는 특허권자의 홀드업(Hold-up)에 대해 당사자간 협상과정에서 합리적인 제안이 있었는지 등 사실에 기반한 조사를 위해 노력 중
 - 또한 특허권자의 악의적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심의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당사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특허 시스템 개선조치를 강구하고 있음

4. 제 4 발표 (발 표 자 :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 NPE의 순기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로 볼 수 없는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경쟁법을 적극 집행하는 것이 필요

* 특허권이 다른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특허기술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혁신을 저해

- NPE는 소규모 발명가들의 특허를 매입·관리함으로써 기술

개발 유인을 제공하며, 특허권 거래의 중개인(intermediary)역할을 하여 특허권의 자본화·유동화에 기여하는 등 순기능을 수행

- 그러나 일부 NPE는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토대로 과도한 실시료를 요구하여 혁신을 저해

* NPE가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은 235건('04)→3,174건('13)으로 13.5배 증가였으며, 삼성전자·LG전자는 전체 피소업체 중 각각 2위와 12위를 차지 (출처 : Patent Freedom)

** 한국기업들에 대한 NPE 제소건수도 50건('08)→274건('13.11)으로 급증하였으며, 중소기업에 대상 제소건수도 9건('08)→42건('13.11)으로 증가(출처 : 한국특허청)

- NPE의 특허권 행사남용 사례로는 ① 사나포션, ② 특허 끼워 팔기, ③ 특허 담합, ④ 다중 소송 제기, ⑤ 표준특허 실시시 FRAND 조건 위반, ⑥ 과도한 실시료 위해 소송 남용, ⑦ 다수의 소규모 기업에 대한 특허권 실시 요구 등이 있음

* 상기 유형들과 관련된 경쟁법 집행 사례는 쏘세계적으로 아직까지는 전무하며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 참조 : NPE 특허권 남용행위 예상 유형 설명 >

- ☐ 사나포션(Privateering) :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제조기업이 NPE에게 자신이 보유한 특허를 이전하고 경쟁사를 타겟으로 특허권을 공격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비용 증가를 유발
- ☐ 끼워팔기(Tying) : 특정 기술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NPE가 실시허락을 원하는 자에게 원하는 특허뿐만 아니라 다른 특허들을 라이선스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 ☐ 특허 담합(Collusion) : 복수의 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NPE를 설립하여,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는 사업자들에게 관련 특허 실시를 거절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으로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 다중 소송 제기(Multiple Claims) :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특허를 복수의 NPE에게 쪼개서 이전하고, 특허권을 이전받은 NPE가 특허를 필요로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의 비용 증대 및 제품가격 상승 유도
- ☐ 표준특허 실시시 FRAND 조건 위반 : 표준특허란 표준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는 특허로 표준특허권자는 이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획득할 수 있으므로 표준화기구(SSO)는 표준특허권자에게 FRAND확약*을 요구함. 이러한 FRAND 조건을 위반하여 특허 억류, 실시료 차별 부과하는 행위

*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terms) 협약 :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공정한 조건으로 특허 사용을 제공해야 할 의무

□ 다수의 소규모 기업에 대한 특허권 주장 : 실시료 지불을 요구하는 편지(demand letter)를 명의법인 회사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규모 기업에 보내면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특허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밝히지 않는 행위

○ 특허 가치 평가 및 특허권자와 사전에 특허권 실시 협상을 하기 어려움

○ NPE의 행위에는 기술혁신 유인과 기술저해 위험이 상존하므로 순기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폐해를 최소화하는 접근이 필요

- 공정위는 위 특허권 남용 예상 사례를 중심으로 NPE의 경쟁법 위반행위를 면밀히 주시할 것임

- 또한, 금년 중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에 NPE의 남용행위 유형·사례, 법 위반 판단기준 등을 보완

* 다만, NPE는 경쟁법이 이전에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이슈로서 통일적인 국제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을 충분히 감안

** 관련 해외동향 분석, 업계 의견 청취, 지재권 전문가 자문, 특허청 등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진할 예정

○ 아울러 NPE 규율 방안 모색 과정에서 글로벌 Consensus 정립을 위해 ICN, OECD 등을 통한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요

5. 제 5 발표 (발 표 자 : Allen Lo, 구글 법률고문)

□ (Allen Lo) NPE의 잦은 특허소송에 시달리면서 대책을 고민해 온 IT업계의 시각에서 발표

○ NPE가 제기하는 지재권 침해소송은 소송에 수반되는 리스크와 비용구조 등을 감안할 때 미국에서 빈발할 수밖에 없음

* NPE가 제기하는 소송이 전체 특허침해소송의 2/3를 차지하며(미국,

2013), 이들의 평균 승소율은 8%에 불과 (非PAE의 경우 40%)

- NPE와의 소송시 제조기업 입장에서는 직접 소송비용, 제품개발 중단, 인력투입 등 유무형의 막대한 재정적 타격이 초래되며, NPE와 화해(settle)를 위해 막대한 합의금을 지불하기도 함

* 이러한 부작용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더욱 심각

- NPE의 특허소송에 연루된 제품 가격이 높게 책정되고 결국 소송비용이 대부분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
- 미국*에서 NPE 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진행 중

* 백악관, 연방의회, 연방대법원, 연방특허청, FTC · DOJ 등

- 현행 지재권 법률은 PAE의 사나포선(Privateering) 행위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어 관계 당국이 FRAND 원칙 준수 여부 등을 검토, 적극 개입할 필요

6. 제 6 발표 [발 표 자 : 강기중, 삼성전자 부사장]

- 삼성전자가 겪고 있는 지재권 관련 법률문제 중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특허남용 대처방법에 대해 발표

※ 발표 내용이 삼성을 대표하지는 않으며 사건임을 전제로 밝힘

- NPE는 소송을 통해 특허침해 금지명령과 함께 막대한 손해배상 요구
 - 특히, **크로스 라이선싱**(Cross Licensing)의 필요성이 없어 반대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없으므로 대응이 쉽지 않음
- 미국의 손해배상소송 과정은 여러 측면에서 NPE에 유리
 - 특허침해소송에서는 배심원 판결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체로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빈번
 - 고의 침해가 인정될 경우 징벌적(3배) 배상이 부과될 수 있음

- 소송에서 특허의 무효를 주장할 때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가 필요하여 절차적으로도 NPE에 유리
- 전세계 관련 당국에서 특허피물을 규제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지만 현재까지 성공적이지는 못함
- 미국은 지재권 관련 법률 개정 논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NPE의 일반 특허권자를 함께 규제하는 한계점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음
- * 연방법원의 Ebay 판결 이후 침해금지 명령을 위한 4대 요건이 적용되고 있으나 NPE가 ITC에 제소할 경우 동 요건들이 고려되지 않는 문제도 있음
- EU의 경우 통일된 규제 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지재권 남용 규제가 회원국별로 다른 상황
- 경쟁법을 통해 NPE의 지재권 남용에 대응할 수도 있으나 부당성 입증에 여의치 않으며 확립된 판례도 존재하지 않음
- 결론적으로 현재의 법률시스템 하에서 침해금지명령 요건에 대한 엄격한 적용-해석을 통해 NPE의 남용행위를 차단할 필요
- 반독점법을 통한 규제가 쉽지는 않으나 충분한 시도 가치가 있으며 입법 보완 이전 단계에서는 경쟁당국의 적극 개입이 필요

□ 사회자 결론

- NPE의 정당한 권리와 남용행위 간의 구별이 쉽지는 않으며, 부정적 효과와 함께 긍정적 측면도 있어 더 많은 연구 필요
- 특허 권리의 소유자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지재권 남용이 될 수 있음
- 직접적인 경쟁법 위반 사례에 대한 설명도 있었으나 아직은 위법성이 분명하지 않으며 국가별 규제, 대응방식에 차이가 있음

- 경쟁법의 활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특허 억류(Hold-up) 사례에 대해 적극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
- 기타 패널들이 제안한 건설적인 대안으로 특허시스템의 퀄리티 제고, 관련 법규의 개정 노력 등도 중요하다고 사료

2세션 **공기업과 경쟁중립성**

(정리 : 김이영 사무관)

- ◇ (사회자) Pierre Poret [OECD 금융기업국 국장]
- ◇ (발제자) Xu Kunlin [중국 NDRC 반독점국장]
Mark Pearson [호주 ACCC 규제개혁국장]
- ◇ (토론자) Stephen Calkins [아일랜드 경쟁당국 위원]
Karl Soukup [EU 국가보조 관련 국장]
Andrey Tsyganov [러시아 연방반독점청 부청장]
Nicolas Petit [벨기에 리에지대 교수]
Andras Toth [헝가리 경쟁위원장]

1. 제 1 발표 (발 표 자 : Xu Kunlin, 중국 NDRC 반독점국장)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최근 법집행 원칙을 소개하고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건의사항 발표
 - 중국은 각 시장주체가 공개, 공평, 공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장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 정부개입에 의한 자원배분을 가급적 지양하고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자원배분을 통해 효율성 극대화 추진
 - * 네거티브 리스트를 지정하고 각 시장주체들이 리스트 이외의 영역에는 자유롭게 평등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
 - 중국 반독점법은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의 소유형태에 따라 차등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
 - 반독점법 집행을 강화하고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쟁 독려, 국가별로 상이한 국내정세 존중, 국제협력 강화를 제안함

2. 제 2 발표 (발 표 자 : Mark Pearson, ACCC 규제개혁국장)

- 공기업에 대한 여러 연구결과, 공기업의 장·단점, 공기업의 경쟁 왜곡문제 해결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발표
 - 민·관에 동일한 규칙 적용 시 공기업의 경쟁우위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그들만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
 - 공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공기업에 의한 시장 왜곡이 가능하나 국가별로 공기업 비중은 감소 추세
 - 시장원칙을 무시하고 공기업이 운영될 수 없으며 공기업의 존재 이유에 대해 타당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 공기업이 경쟁원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될 경우 투자위축을 초래하고 소비자 복지, 국가경제에도 부정적 영향 초래
 - 경영진 입장에서는 민간 기업이나 공기업이냐에 따라 의사결정의 인센티브가 달라질 수 있음
 - 공기업의 경우 프로젝트 또는 투자결정시 반드시 상업적 측면(가격)만 고려하는 것은 아님
 - 공기업은 파산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등 장점도 있으나 성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크고 상업적 동기보다 정부정책에 의해 기업의 의사결정이 크게 좌우된다는 단점도 있음
 - * 공기업은 민간에 비해 시장 변화에 비탄력적일 수밖에 없으며,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도 정책 결정시 고려됨(가령 통신·우편서비스의 경우 수익성이 나지 않는 지역에도 서비스 제공의무가 발생)
 - 공기업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제시 (민영화, 소유지배구조의 변경 등 구조적 변화, 경영진에 대한 효율적 보상 체계 마련 등)
 - * 경쟁중립성의 핵심은 투명성과 의사결정의 청렴성이며, 해당 공기업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시장에서 이를 명확히 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면 공기업의 문제가 많이 해소될 수 있음

3. 제 3 발표 (발 표 자 : Stephen Calkins, 아일랜드경쟁당국 위원)

- 경쟁중립성이 주요 경쟁당국에서 실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사례를 들어 소개
- 경쟁중립성에 대해 국제기구 등 다수 국가의 관심이 증대
 - ICN이나 미국에서도 국영기업에 대한 경쟁법 적용과 관련하여 설문이 이루어진 적이 있음
- 경쟁중립성 촉진이나 경쟁중립성이 작은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최근 EU, 미국의 판례 소개

4. 제 4 발표 (발 표 자 : Karl Soukup, EU 국가보조 국장)

- 국영기업에 대한 EU 경쟁법 적용 내용에 대해 발표
- EU는 기업의 소유형태에 대해 중립적이며 공기업과 사기업을 동등하게 대우 (TFEU 106조 규정)
- 다만, EU조약은 국가의 공공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공기업에 대해 경쟁법 적용 예외*를 규정
 - * 1) 해당 기업이 공익에 부합하는 서비스 운영에 책임이 있고, 2) 조약을 적용할 경우 해당 서비스 공급에 지장이 있고, 3) EU 전체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함
- 현재와 같은 글로벌 경제에서도 상호주의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점*(Lack of Reciprocity)에 대한 EU 기업들의 불만을 언급
 - * 제3국 기업은 EU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활동하는 반면, 이들 국가는 경쟁법을 차별 적용하여 EU 기업들이 당해 국가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데 애로

5. 제 5 발표 (발 표 자 : Andrey Tsyganov, 러시아 FAS 부청장)

- 러시아의 국영기업에 대한 경쟁법 집행동향과 방향을 소개

- '06년 법 개정으로 공기업도 경쟁법 적용대상이 되었으며, 이후 공기업에 대한 조치 사례도 다수 있음
- '18년까지 경제전체에서 공공부분의 비율의 축소 계획을 소개하고 공기업에 대한 법집행 방향이 효율성과 질 향상임을 언급
- '13년 ~ '24년 기간 중 경쟁도입 전략을 소개
 - 국가나 지자체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제거하고, 정부기관이 독립 기업체를 설립할 경우 경쟁당국의 승인을 거치게 할 계획

6. 제 6 발표 (발 표 자 : Nicolas Petit, 벨기에 리에쥬대 교수)

- 최근 국제사회 논의가 공기업의 경쟁중립성에서 나아가 정부의 국가챔피언 보호로 전환되고 있다고 하면서 GE의 프랑스 Alstom 인수 사례를 발표
 - 실제 GE/Alstom사례에서 정부개입으로 GE의 Alstom 인수 내용이 변경되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프랑스 자국산업 보호가 목적이었음
 - 당초 계획은 흡수합병이었으나 동등한 alliance로 변경 조치
 - 당사자 중 GE는 국가개입이 비용 상승만 초래했으며, Alstom은 국가챔피언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 주장
 - 일반적인 의견은 국가챔피언의 경쟁자에게는 시장진입비용을 증가시키고, 국가챔피언에게는 출구(exit)비용을 증가시킨다는 것임

7. 제 7 발표 (발 표 자 : Andras Toth, 헝가리 경쟁위원장)

- 경제위기시 헝가리 경쟁정책의 수단이었던 再국유화(Re-nationalisation)와 공기업에 대한 경쟁법 집행 경험 소개
 - '08년 경제위기시 외화현금부채가 GDP의 28%를 초과하였고 천연가스 가격은 이웃 국가에 비하여 20%이상 높았음

- 당시 대출 중단과 고가의 천연가스는 경제회복을 지연시켰고 이는 은행과 천연가스 분야에서 국가 지분보유비율이 낮은 데 기인
 - * 2008년 당시 은행과 천연가스 분야의 경우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민영화가 이루어진 바 있음
- '13년 경쟁법을 개정하여 국가전략상 중요한 기업결합에 대해 신고의무 면제를 도입하였고 현재 3건의 면제가 이루어짐

3세션 아시아 경쟁법의 조명과 도약을 위한 과제

(정리 : 김이영 사무관)

- | | | |
|---------|-------------------|------------------|
| ◇ (사회자) | John Davies | [OECD 경쟁분과 Head] |
| ◇ (발제자) | Kazuyuki Sugimoto |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위원장] |
| | 이 황 | [한국 고려대 교수] |
| ◇ (토론자) | Leslie Overton | [미국 DOJ 부차관보] |
| | Nawir Messi | [인도네시아 KPPU 위원장] |
| | Xiaoye Wang | [중국 호남대 교수] |
| | Yanbei Meng | [중국 인민대 교수] |

1. 제 1 발표 (발 표 자 : Kazuyuki Sugimoto, 일본 공취위 위원장)

□ 일본의 최근 법집행 동향 및 국제 협력에 대해 발표

- 엔지니어링 작업과 도로포장작업(Chiba Prefecture 발주), 제설장비 (일본 철도건설기관 발주), 송전(TEPCO발주) 부분 등의 입찰담합을 시정한 경험을 소개
 - 수퍼마켓, 할인점 등 유통업체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도 시정
- 일본 공취위의 경쟁주창 활동의 사례로 보육시장의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을 소개
 - 출산율 하락과 육아문제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어 경쟁촉진을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안
- * 주식회사 등 다양한 사업자의 진입 허용, 세제·보조금의 공평성, 정보의 공유, 추가적인 서비스 제공
- 국제협력사례로 ASML(반도체장비), HDD(하드디스크) 기업결합 사건에서 韓美 당국과의 공조, 해상운송카르텔·자동차부품 가격담합 사건에서 미국, EU당국과의 공조에 대해 소개

2. 제 2 발표 (발 표 자 : Nawir Messi, 인니 KPPU 위원장)

- 인니 경쟁당국(KPPU)의 법집행 경험을 통해 경쟁당국이 겪고 있는 문제점과 향후 방향에 대해 발표
 - 인니 경쟁당국은 조직과 조사권한의 문제로 인한 한계를 소개
 - 시간 제약, 비협조자 처벌 불가, 결정에 대한 집행상 한계, 과징금의 재발방지 억지력 미미 등
 - 카르텔사건 소송에서 당국이 패소하는 이유는 정황증거(circumstantial evidence)를 법원이 수용하지 않기 때문
 - 또한 정확한 경제분석을 위한 데이터가 부족(데이터 절대량이 부족하고 공식·비공식 데이터 나뉘어 있기도 함)
 - 기업결합이 사후신고제도로 운용되어 실효성이 낮고, 무역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정부와 연결되어 경쟁법 집행을 어렵게 함
 - 장기계획으로서 중기 발전계획에 경쟁을 최우선하도록 하고, 경쟁 중립성에 대한 개념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책에 대한 경쟁검토(competition checklist)를 적용하도록 할 계획
- ⇒ 사회자는 경쟁법 집행을 위한 KPPU의 툴 마련 작업을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논평

3. 제 3 발표 (발 표 자 : Leslie Overton, 미국 DOJ 부차관보)

- 경쟁법 집행시 준수되는 절차나 중요한 고려요소들에 대해 미국의 집행경험에 근거해서 발표
- 경쟁법 집행에 있어 고려해야 할 7가지 요소들에 대해 설명
 - * ① 투명성과 절차적 공정성, ② 독립적인 심사기관, ③ 법집행에서의 경제의 역할 ④ 경쟁당국의 결정이 경제에 기반, ⑤ 효율적이고 합의에 기초한 결정, ⑥ 초국경간의 협력 및 참여, ⑦ 적극적인 경쟁주창

- 공공기관은 가능한 모든 절차적 공정성에 따라야 하고 이는 경쟁당국의 사건처리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
- 경쟁당국간 다른 결론이 도출되는 경우가 있으나, 상호 다른 절차를 이해한다면 결론이 다르더라도 이해가 증진될 것임
- 사건처리 과정에서 별도의 경제분석 담당 50여명의 박사가 참여하고 있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있음
- 경쟁법 사건이 여러 국가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아 국제 공조가 중요하며 이를 통해 경쟁법 집행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

4. 제 4 발표 (발 표 자 : 이황, 고려대학교 교수)

- 아시아 각국의 경쟁법 도입 추이, 주요 법집행 사례를 소개하고 아시아 지역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미국과 EU가 경쟁적으로 자신의 경쟁법 체제를 다른 국가에 전파하기 위해 노력
- 아시아의 입장에서는 EU모델이 경제 분석에 대한 부담이 덜해 수용이 용이했던 것으로 보임
- 현재 세계 3대 경쟁법의 축은 아시아, EU, 미국
- 특히, 아시아의 법 집행이 강화되고 있고 글로벌 M&A사례로 BHP/ Rio Tinto, WD의 HDD, ASML, Intel/Qualcomm건 등이 처리됨
- * 상기 사례 등에서 한국 공정위가 타 경쟁당국과의 공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공조 필요성을 강조
- 아시아 경쟁당국은 광범위하고 충돌 가능한 정책목표, 산업 정책의 다른 형태로서 경쟁정책 운용, 정치한 경제 분석 부족 등의 한계가 있음
- 동·서양간 경쟁법의 불균등한 집행은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쟁이나 소비자 후생에 손해

- 다만, 글로벌 경쟁정책도 아시아의 문화와 고도성장을 반영한 새로운 버전이 요구되며 아시아의 정책요구나 문화배경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
 - 가령 아시아권은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공정성을 위해 효율성이 희생될 수 있음도 유념할 필요 (正名에 의한 행동)
- ⇒ (사회자 논평) 다른 경쟁당국의 집행을 원칙을 이해하여 장단기 시점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경쟁 원칙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

5. 제 5 발표 (발 표 자 : Wang Xiaoye, 호남대 교수)

- 공익, 산업정책과의 충돌에 의한 경쟁법 적용 제외시 어려움에 대해 설명
 - 중국이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 일부 정책이 경쟁 정책과 충돌하는 사례도 하지만, 반독점상 기본원칙은 경쟁임
 - 공익(public interests)은 정의하기가 어렵고 산업정책과 관련성이 큼
 - 공익에 따라 경쟁법 적용을 제외할 경우 중국은 국영기업이 많아서 적용이 제외될 가능성이 큼
 - 아울러,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은 어느 나라에서나 충돌이 가능
 - 중국이 변화 과정에 있고 정부정책이나 기업 요구를 반영해야 하므로 중국 경쟁당국은 산업정책을 고려할 수밖에 없음
 - NDRC는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대형 사건을 처리해왔으며 (China Telecom, LCD담합 건 등) 조치대상 기업에 국영기업도 포함
- ⇒ 이는 중국 정부가 단지 산업정책만 고려하는 것이 아님을 시사
- 중국의 반독점법 집행은 많은 도전에 직면할 것이며, 경제의 글로벌화는 경쟁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할 가장 큰 동기임

6. 제 6 발표 (발 표 자 : Meng Yanbei, 인민대 교수)

- 중국의 경쟁법 집행이 강화되면서 집행능력 또한 글로벌 기준에 수렴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
 - 중국의 법집행이 강화되고 있으나 국제 수준을 따라가기에 아직 부족
 - 중국의 향후 경쟁법 발전 방향은 다음 4가지 측면으로 요약
 - ① 반독점법 집행 지속 강화, ② 국제화 수준 제고(단, 중국의 특성을 유지) ③ 시장경쟁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집중, ④ 집행 역량의 강화(사례 : 지식재산권 분야의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 등) 등

□ 사회자 결론

- 아시아 경제의 성장을 반영하는 문제, 개도국과 관련하여 서구의 경쟁법 체제를 도입하는 문제가 논의되었고 한국, 일본의 법집행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
- 경쟁법이 아시아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왕 교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견해를 피력했지만, 개인적으로 아직 비중있는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한 것 같음